

2·28의 화살

2001 / 9

제1권 3호 통권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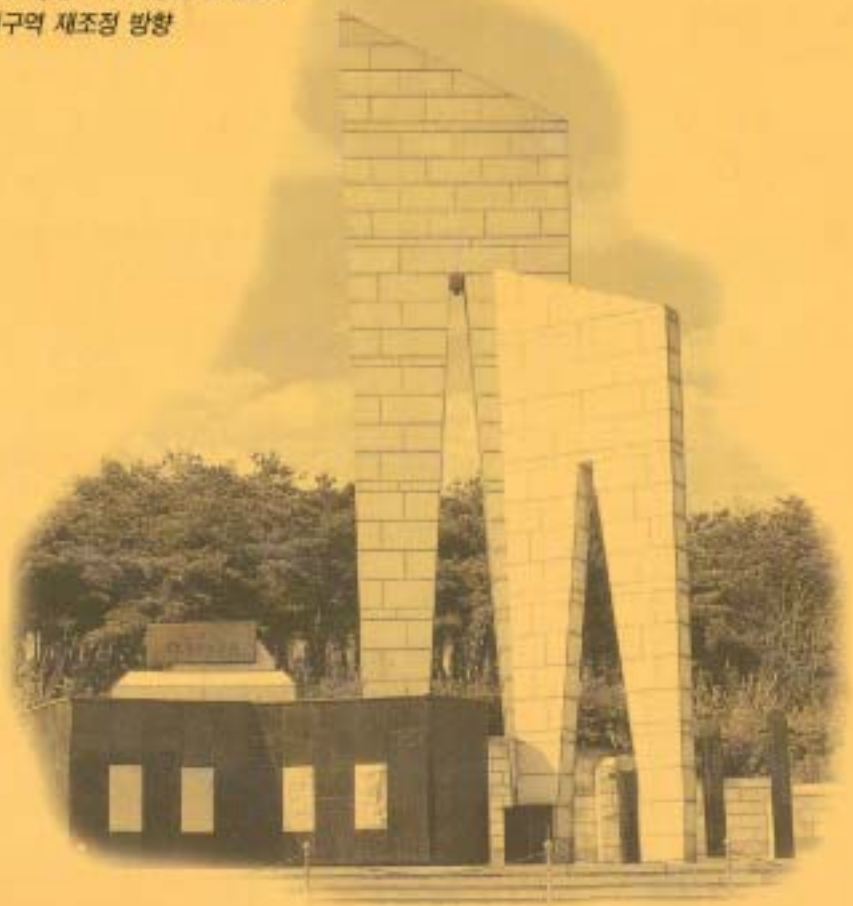
시 본 일제(日帝)를 애고 가는 일본

기획특집 일본의 무경화와 우리 사회의 대응방안

지역쟁점 대구시 지역안 살펴보기

인구·재정만을 이유로 한 행정구역 조정은 반대한다

대구시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재조정 방향



사단
법인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2·28 자료를 찾습니다

2·28기념사업회에서는 숭고한 2·28대구학생민주운동을 대구정신운동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 2월 28일 가칭 2·28공원(구 중앙초교 부지)기공식과 더불어 각종 기념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28대구학생민주운동은 광복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의 효시였으며 4·19혁명의 진원이었습니다. 이와같이 훌륭하고 소중한 대구 2·28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빛내기 위해서는 2·28 관련 자료들이 있어야만 각종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보관된 2·28관련자료들이 미흡하여 2·28을 되새기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2·28기념사업회에서는 사단법인 출범과 더불어 2·28관련 자료들을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이든 보관하고 계신 사진이나 서적, 글과 숨겨있던 뒷얘기 등을 보내주시면 본 법인에 영구 보전은 물론 2·28기념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우쪼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며 2·28자료찾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28 자료 : 사진, 영상, 서적, 글, 사실증언 등

〈보내주실 곳〉

사단법인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701-81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3동 164-1(대구은행 신암동지점 2층)
TEL : (053)943-0228 FAX : (053)959-2860
E-mail : 228demo@hanmail.net
홈페이지 : <http://www.228.or.kr>

2·28의 햇불

2001년 9월 / 제1권 3호 통권 3호 계간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2·28시론

4 일제(日帝)를 메고 가는 일본 / 김희곤 인동대 사학과 교수

기획특집

10 '햇불' 토론 : 일본의 우경화와 우리 사회의 대응방안

지역행동 / 대구시 행정구역 재조정

16 인구·재정만을 이유로 한 행정구역 조정은 반대한다 / 황대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21 대구시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재조정 방향 / 김연기 대구대학교 교수

25 대구시 행정구역 조정안 살펴보기 / 김석태 경북대학교 교수

시민단체 행방

30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31 대구참여연대

회원광장

32 시-다시 낮에 꾸는 꿈 / 이태수 시인

33 수필-2월 하늘을 우러러 보며 / 곽형서

자유기고

36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역지식인 선언 / 전국 지역 지식인 일동

39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 이종주 대구상업정보고등학교 총동창회장·전 대구광역시장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안내

42 글짓기공모전 입심작 책자 발간·글짓기공모전 개최·일지·하계 세미나 개최

행방 / 시대부고판

48 부고의 2·28학생의거기념 조각물 / 백태효

입회안내

2·28의 햇불 2001년 9월
제1권 3호 통권 3호 계간
발행인 / 송정길 · 편집인 / 박영근
발행일 / 2001년 9월 27일
편집주간 / 오상근
편집위원 / 장서익 역평을 박태모 박건호 유순근
이성근 박석기 최연복 장동익 남대현
김성수 강명필 이원익 김익수 신승환
김영용 김일수 박영길 이병연 이영호
백승미 박영길 김영달
발행처 / 식민탑길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701-013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3동
164-1(대구은행 건물 2층)
TEL : (053)943-0228, 959-2862
FAX : (053)959-2860
E-mail : 288demo@hanmail.net
홈페이지 : http://www.228.or.kr
연세 / 경북연세(주)

일제(日帝)를 메고 가는 일본



김희곤 | 인동대학교 교수

일본과 일제는 어떻게 다른가

일 본과 일제가 다른 뜻을 가진다는 것쯤은 누구나 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본과 일제의 실격을 구별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일본의 움직임을 역사적인 큰 틀로 그려내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별로 재미없는 표현이지만 일본은 일본이다. 즉 일본이라는 말은 한국의 동쪽에 자리잡은 한 국가의 고유한 이름이요, 여기에는 여러 국가들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일 뿐, 그 이상 또는 그 이하의 어떠한 뜻도 가지고 있지 않다. 마치 올림픽 개막식에 입장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깃발 가운데 하나처럼, 지구를 구성하는 여러 국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피부 빛이 검은 희든, 사용하는 언어가 어떠한 간에 관계없이 각각 다른 역사와 문화를 지닌 하나의 '국가'로서 동아시아의 끝자락에 자리잡은 섬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그렇다면 일제는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제'는 '일본제국주의'의 준말이다. 즉 제국주의시대를 구가하던 일본을 일컬어 그렇게 부른다. 그렇다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18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선진자본주의국가가 다른 저개발 국가들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삼고, 그것을 연료공급기지 및 상품판매시장으로 만들어버린 체제를 말한다. 그러므로 일본제국주의란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여 그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이를 자국의 경제권으로 확보하던 시대의 일본을 의미한다.

일본은 제국주의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 맨 먼저

유구국(琉球國, 오키나와)을 병합하고, 이어서 1874년에 타이완을 공략하였던 군함, 운요호를 이듬해에 조선으로 돌렸다. 그리고서는 만주를 거쳐 중국본토를 침략하는 한편, 남쪽으로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로 전쟁을 확장시켜 나갔으며, 결국에는 뉴질랜드에 이어 미국 공격으로 밀고 나갔다. 시장 장악을 위해 전쟁을 키워가다가 제국주의국가들끼리 패권 장악전을 펼친 것이다. 이것이 일본제국주의, 즉 '일제'의 역사다. 1945년 8월에 그 일제가 원자탄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일제'의 시대는 끝나고 '일본'의 시대가 다시 시작될 순서였다. 그런데 가장 큰 비극은 사실상 일본제국주의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일제(日帝)를 청산하지 않는 일본

일본제국주의가 폐망하였으니, 일제가 끝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 실제로 어머렸는지 한번 눈을 무릅뜨고 살펴보자. 일껏 살펴보기만 해도 일본이 일제를 전혀 청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명백하게 증명해주는 세 가지의 증거를 들어보자.

첫째 증거는 '친황제'를 청산하지 못한 점이다. 누가 뭐라 해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최고급의 전범은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일본의 히로히토 등 세 사람이었다. 이들 가운데 히틀러는 자살하였고, 무솔리니는 총살당했는데, 오직 히로히토만은 제 수명대로 잘 살다가 병으로 죽었다. 일본 패전 직후에 미국은 최고의 전범인 일본왕에 대해 '신(神)'을

1945년 8월에 그 일제가 원자탄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일제'의 시대는 끝나고 '일본'의 시대가 다시 시작될 순서였다. 그런데 가장 큰 비극은 사실상 일본제국주의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일본이 일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는 '천황제'의 존재와 집권 자민당의 역사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독도문제로 뚜렷하게 확인된다.

'인간'으로 꼬집어 내렸다고 스스로 평가하였지만, 실제 일본왕을 전범으로 처리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이 오늘날까지 '일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도록 방조한 책임도 있다. 일본인들은 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도요조오를 비롯한 몇몇 각료들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왕을 제자리에 되돌려 자리잡게 만들었다. 결국 일본왕은 전범으로서 처형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자리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제'가 잔존했다는 두 번째 증거는 '자민당'의 행태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들은 과거의 청산보다는 오히려 맥을 이어나가자고 목소리를 키워오고 있다. 패전한 지 10년만인 1955년에 일본 자민당이 만들어졌다. 초대 당수가 된 하토야마나 7대 수상인 된 기시 노부스케 등 당시 주역들은 대체로 팽창주의자 출신으로 공직에서 추방되었거나, A급 전범자 출신이었다. '일제'가 아닌 '일본' 시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역사회귀적인 인물들이 부활한 것이었다. 어찌 보면, 역사를 다시 거꾸로 흐르게 하려는 것은 그들에게는 당연한 논리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오늘날 일본의 정서가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는 듯하다는 데 있다.

셋째, 일본의 제국주의 속성은 '독도' 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일본은 1905년 2월에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고, 패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일본의 영토임을 확인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1905년, 즉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제국주의 팽창 과정에서 이 섬을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사실 그 자체가

그들의 제국주의를 말해주는데, 패전한 일본이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국제회의에서 이 섬을 반환하기보다는 오히려 국제적인 확인 아래 자신들의 영토로 묶어 두려 한 그 자체가 제국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증거인 것이다. 도둑질하거나 빼앗은 물건을 모두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것으로 확정하려는 자세는 결코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바라는 차원이 아니라 침략과 약탈을 정당화시키려는 태도이다.

독도문제에 관심을 가진 일본 사람들 가운데 95% 정도가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일본 정부 관료와 언론의 자세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인들이 정부에 '타케시마가 정말 일본의 영토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면, 내무부의 기록국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영토임을 확인하고, 정기국회에서는 해마다 반드시 한 차례 '타케시마가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데 대해 항의한다'라는 정부 답변을 회의록에 남겨두고 있다. 이 사실은 그들이 과거 침략을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오히려 그 자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한국사 전문가인 카지무라 히데키는 일본 정부와 언론이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인이 순전히 때를 쓰고 있다'는 식으로 알리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정도이다.

이처럼 일본이 일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는 '천황제'의 존재와 집권 자민당의 역사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독도문제로 뚜렷하게 확인된다.

그들은 잔재 청산이라는 것을 아마 상상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지켜나가기야 한다는 주장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때문에 그들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침략행위에 대하여 끊임없는 망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강도를 높여 가는 침략성 행위들

1) 망언은 말로 뱉어내는 침략이다

우리는 구로다 망언 이후 수많은 방발을 들으며 분개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지내왔다. 그런데 이들 망언이 결코 소수에 의한 우연적인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선 망언 내용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나카 수상도 그랬던 것처럼 과거 그들의 망언은 아시아의 근대화와 자본주의화에 일본의 통치가 상당히 기여했고, 따라서 일본의 통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 골자였다. 그런데 요즈음의 망언은 이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들은 합방이나 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망언을 뱉어 놓았다.

(1) 합방 관련 망언

한일합방은 양국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

- 후지모 마사유키 전 문부상

안중근의 이토오 히로부미 저격이 합방을 일으킨 원인이다.

- 신핀 일본사

(2) 침략에 대한 망언

일본은 어떤 나라도 침략한 일이 없고, 태평양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다.

- 하시모토 류타로 전 통산성 장관

백색인종이 침략자이지, 일본은 침략자가 아니다.

- 오쿠노 세이스케 전 국토청 장관

일본이 미국과 영국에 선전포고하였지, 아시아 국가들과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침략전쟁이라고 해서 안 된다.

- 오쿠노 세이스케 자민당 의원

우리가 한 것은 자존 자위의 전쟁이요, 그것은 최량에도 기록되어 있다. 때문에 반성할 것은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이다.

- 마유즈미 도시로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이사국으로 지지한 것은 일본을 신뢰하고 '대장'으로 여기기 때문이며 일본은 여기에 보답해야 한다.

- 가세 도시카즈 종전50주년국민위원회 위원장

여기에서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유는 망언의 수위가 극히 위협해진 것과 발언자가 소수 극우세력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다수가 각료급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과거 전쟁을 정당화시키고 미화시켜 놓고서, 이제 그들은 한 걸음 성큼 나아가 다시 전쟁을 하자고 부르짖고 있다.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일본국을 일으켜야 한다. 전투는 이제 시작이다.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 니시무라 신진당 의원

이쯤 되면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직전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1943년 대동아회의에서 그들의 목표가 그들 중심의 아시아 해방이라 했는데, 이제와서는 아시아의 큰 형님으로서 다른 국가들의 요구에 보답해야 한다니, 이것은 바로 50년 전과 동일한 양상인 셈이다. 다만 당시와의 차이는 당시만큼 전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문제는 되풀이되는 일본의 망언이 60년 전의 그것을 부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의 망언이 우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성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앞으로 이런 형태의 망언은 끊임없이 튀어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2)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의미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분노시켰다. 우리는 그곳이 청일, 러일전쟁 이래의 250만 전사자의 위패를 모신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1978년 그곳에 도오조오 히데끼를 비롯한 처형당한 전범 7명도 합사되었다는 사실은 사실 잘 모르고 지내왔다. 그런데 일본군국주의의 본산인 그곳에 전후에 들어 일본 수상으로는 처음으로 나가 소네가 참배한 것이 1985년이었던, 그도 또한 우익 전

역사교과서가 침략을 정당화할 경우, 그것은 당연히 침략교과서가 된다.

일본이 그러한 역사교과서를 만들면, 그것은 당연히 '일본'이 아닌 '일제'의 침략교과서가 된다. 따라서 일본 우익의 역사편찬 방향은 바로 '재침략의 신호탄'이다.

범 출신이었다. 그의 참배는 침략을 정당화하는 공식적인 행위였는데, 이것이 증폭되어 해마다 각료들이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참배하여 왔다.

그들 가운데는 '일제'를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와 달리 그들을 새로운 '일본'이라고 보아온 듯하다. 우리는 그들을 '일본'으로 대하고 있는데, 그들은 '일제'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아시아의 대형(大兄, BIG BROTHER)이요, 아시아의 해방자로 자처하는 그 자체가 군국주의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그들의 망언을 대하는 우리의 위기감을 과민반응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찍이 동양평화론을 주장하다가 1940년대에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논리를 산출하여 아시아를 침략하였기 때문이다. 1943년에 동경에서 열린 대동아회의에서 그들은 아시아의 큰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아시아의 패권 장악이었다. 그런데 1995년에 일본의 '종전50주년기념국민위원회'는 다시 자기들을 '대장'이라고 밝히고서 '아시아주의'를 들고 나왔다고, 이후 해마다 우익들은 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것이 대동아 공영권의 새로운 호칭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도가 일본은 독도를 자기의 영토라고 해마다 밝혀 왔다. 최근에는 이를 넘어서서 민간 차원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니, 이를 통해 그들은 일본 국민을 애국심이라는 미명 아래 동치려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아시아의 큰 형' 구실을 다시 자처하고 나서는 길목에 그들이 서 있다는 생각을 억누를 수 없다.

3) 우익의 역사교과서는 재침략의 신호탄

일본 우익세력이 주도하는 역사교과서 서술은 한 마디로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

의 침략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이와 반대로 한국사에 대해서는 침략을 유발시켰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항목들을 보면, 임나일본부설·삼국조공설·임진왜란·정한론·강화도 침략·청일전쟁·러일전쟁·강제병합·황민화정책·군대위안부·강제징용 등이 그 핵심들이다. 어느 항목이나 마찬가지로 일본의 침략과 한국의 피침략을 당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하기야 남이 뭐라 하든 저기에 연연해 할 것이 무엇이나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렇게 남을 침략하는 국가가 저 멀리 아프리카나 중동의 이야기라면 왜 우리가 애태우겠는가. 오직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생사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치 복잡한 버스나 전철 안에 우람한 몸매를 가진 사람이 들어서면 주위 사람들이 몸을 움츠려야 하고, 더구나 그 큰 덩치가 숨을 크게 들이쉬거나 어깨를 휘적거리면 옆 사람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는 달하지 않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 아래 주먹을 내지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우익이 지금 역사교과서를 새로 편찬하면서 과거의 팽창과 침략을 찬미하고 있다. 그것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거 그들 조상의 팽창과 침략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찬미할 만한 가치를 가진 것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방향 지시를 담고 있다.

역사교과서가 침략을 정당화할 경우, 그것은 당연히 침략교과서가 된다. 일본이 그러한 역사교과서를 만들면, 그것은 당연히 '일본'이 아닌 '일제'의 침략교과서가 된다. 따라서 일본 우익의 역사편찬 방향은 바로 '재침략의 신호탄'이다.

그리고 재침략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는 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은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걱정하고 또 우려하는 것이다.

왜 일본 우익이 강성으로 나오는가

새로운 세기를 맞으면서 일본 우익은 그리 편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아시아를 중심에 둔 국제 열강의 세력구도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근대에 들어 150년 정도 아시아의 대표성을 내세우고, 또 주인공으로 행세하던 그들의 입지가 여지없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세기에 들어 일본은 역사 이래 처음으로 세계사의 중요 존재로 떠올랐다. 서유럽이 세계를 식민지로 편입할 때,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그 백색 유럽의 독점적인 대리점이자 배타적인 총판을 열고 마음대로 잇속을 채웠다. 그러다가 조금 돈을 벌게 되었다고 이번에는 직접 원료공급지와 상품판매지를 확장하다보니, 본점과 마찰이 생겼다. 결국에는 서유럽 본점의 충실한 아시아 대리점임을 자처하던 일본이 서유럽 열강들을 '백색 오랑캐'라 부르면서 맞섰다. 자신들의 시장을 확보하려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아시아를 지켜야한다고 목적을 둔다면, 아시아민족이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그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였다. 그러나 승전국가인 미국은 일본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전후 복구에 엄청난 돈을 부어 넣었다. 마침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한국분단 문제는 한국전쟁을 가져왔고, 그 틈에 전쟁특수를 누리면서 일본은 우뚝 다시 일어섰다. 식민지로 한 번 짓밟고, 이제 다시 전쟁 틈에 이익을 쟁겨 일어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은 식민지의 아픔을 치유하기도 전에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고통을 거듭거듭 겪어야만 했다. 이와는 정반대로 일본은 책임추궁은 고사하고 오히려 경제성장을 향해 쾌속 순항을 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제1차 대전이후 소련과의 양대 세력구도로 상정하고 여기에 맞는 정책을 밀고 나갔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앞세웠고, 일본도 미국의 대리점으로서 역할을 기쁘게 맡으면서 어깨에 가득 힘을 주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면서 그 구도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즉 미국-소련의 구도에서 미국-중국의 구도로 바뀐 것이다. 그 결과 이제는 일본이 미국의 대리점이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적인 시장터로 변하고 있다. 결코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아시아에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능가할 큰 행이 긴 잠에서 깨어난 사실과 마주친 것이다. 150년 동안 누려온 자신의 배타적 독점적 지위가 여지없이 무너질 지경에 다다랐으니, 위기 중에서도 큰 위기가 아닐 수 없고, 특히 일본 우익로서는 너무나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동시키는 것이요, 그렇게 하자면 침략과 팽창을 정당화시키는 의식화 교육이 긴요할 따름이다. 그래서 사실상 침략적 언사와 행동을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것이고, 구체적인 걸음걸이가 역사교과서 파동이나 아스쿠니신사 참배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어떻게 대처하나

일본 우익의 강성 행동은 바로 우리의 가슴에 비수를 겨누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들의 침략적인 발언이나 행위는 아시아 여러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를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처할 현실적인 방안들을 검토해보자.

첫째, 과거 십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초점이 반미운동에 쏠리고 있던 틈을 타고 일본의 풀밀 침투가 진행되었는데, 우리가 그들의 움직임을 놓치고 있었다. 반미 구호가 대학가를 뒤덮다시피 해도 일본 우익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틈에 우리는 일본 우익의 동향을 추적하는 데 상당한 허점을 보였다.

이제는 사회 각종 시민단체나 조직에서 나름대로 일본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그래서 군국주의 부활이나 새로운 침략의 꿈을 가진 우익의 준동을 감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그렇다고 해오던 구호들을 버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눈 앞의 상대 가운데 하나만 물고늘어지다 보면 정

아시아 사회의 평화 공존은 바로 '일제'가 아닌 '일본'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책임이 우리 세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침략적 역사교과서 서술과 채택, 망언이나 최고 전범들에 대한 미화 작업 등 침략성을 지닌 행위들이 바로 새로운 침략의 신호탄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작 열구리 돌리는 일을 피할 수 없기 마련이다.

둘째, 정부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국민들 가운데 다수는 정부의 대처 자세가 너무나 미약하다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다.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범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어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통성이 문제되는 정부라면 한일협상 폐처럼 밀실에서 해치우고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투명성을 내세우는 시대가 아닌가. 따라서 개방된 이 시대에 정부는 정권 유지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 민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투쟁해야 한다. 독도 문제를 강하게 들고나오면, 비록 전략적인 차원일지라도 '침략' 이거나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당당하게 나설 뱃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일본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에 우리가 나서야 한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우리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원한 일이었다. 독일은 자신을 침략국이라고 인정하고 프랑스, 폴란드와 침략시기의 역사를 공동으로 집필하려고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런 일을 일본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기막힌 일은 거꾸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오늘이 침략전쟁의 잘못을 부정하는 '일제'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인들, 특히 청소년들이 일본의 과거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것은 일본의 왜곡된 정책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과거의 실상을 담은 일본어로 된 책자와 영상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것 같다.

넷째, 일본의 '일제화'를 막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과의 연대작업이 긴요한데, 역사교과서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 연대 활동은 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 연

구자나 사회단체 차원에서도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실제로 중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연구자나 중국인들은 합일투쟁사를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또 일본 우익의 준동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 이들과 연계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시켜 나가야 한다.

다섯째, 국사 교육, 그 가운데서도 근·현대사에 대한 강의를 의무화시켜야 한다. 7차 교육과정 개편은 국사과목을 사회과목의 한 분야로 포함시키고, 그것마저도 조선후기까지만 다루면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이에 저항하는 부분은 선택과목으로 돌려 버렸다. 이렇게 되니 사실상 고교 3학년이 되어 난이도가 높은 근·현대사 과목을 피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일본은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시키는데 비해, 우리는 강의 자체를 포기하는 길을 택하였으니, 이것은 일본에 대한 무항 그 자체이다.

위기감에 젖은 일본 우익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마찰을 일으킨다든지, 특히 독도문제를 걸고넘어지면서 위기감을 조성한다든지, 또 미국과 경제적인 충돌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두 '새로운 진출', '새로운 침략'을 열어나가는 전략으로 추정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아시아는 불행한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아시아 사회의 평화 공존은 바로 '일제'가 아닌 '일본'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책임이 우리 세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침략적 역사교과서 서술과 채택, 망언이나 최고 전범들에 대한 미화 작업 등 침략성을 지닌 행위들이 바로 새로운 침략의 신호탄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햇볕’ 토론

일본의 우경화와 우리 사회의 대응방안

사회 : 오창균 | 편집주간

토론 : 류진춘 | 경북대학교 교수

이성환 | 계명대학교 교수

박홍영 | 영남대학교 감사

고이즈미 정권의 등장배경과 그 의미

사회자 서구사회를 보면, 20세기말부터 보수주의 흐름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국가체제가 신자유주의적 시장중심체제로 바뀌었고, 문화적으로도 일종의 윤리재정립운동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아시아의 변화이고, 그 중에서도 일본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한·일 양국간 갈등을 빚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라든가,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바로 일본이 서구 보수주의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우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 고이즈미 정권 등장의 배경이나 정치적 의미가 궁금해집니다.

이성환 고이즈미 정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의 새로운 내각이 들어설 때마다 군국주의 망령 부활을 우려하고, 분노하고, 경계해왔습니다. 거의 정기적으로 이를 되풀이해온 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고이즈미 정권의 등장배경이 흔히 말하는 일본의 우경화 흐름 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치·경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가를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 수상이 아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극우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어떤 경향과 직결시키기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류진춘 고이즈미 정권 출현 그 자체를 일본의 우경화 추세와 바로 대입해서 이해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신보수주의적 세계화와 일본 국내의 정치·경제사정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 들어서 일본 자민당은 전통적인 정치적 지지기반을 상당부분 상실했습니다. 일본 경제도 전후 안정적인 성장이 중단된 가운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모두 불안한 것이지요, 고이즈미의 정치적 행동은 바로 국민정서 저변에 흐르는 불안감을 알아차리고 자극하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하필 그 내용이 우리 한국이나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이해와 연관되다보니 관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요.

박홍영 저는 일본의 우경화라고 할 때 도대체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그렇게 지칭하는 것인지 궁금
해집니다. 가령 역사교과서 왜곡이나 야
스쿠니신사 참배를 우경화 현상의 예
로 보는데, 사실 그 정도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유럽 여러 나라
에서도 얼마든지 발생 가능한 일들
입니다. 한 국가 내에서 당연히 이루
어지는 사건이나 현상이 일본의 경우
우경화라고 외부비판을 받는다는 것이
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일본을 특수하게
볼 것인가, 아니면 지구상 많은 국가들과 다
름없는 보편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하는 문



토론시작 전 담소를 즐기고 있는 모습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당연히 후자를 택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행동이나 사고가 감정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
수한 입장에 있지만 이것을 비교적 객관화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고이즈미 정권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고이즈미 정권이 특별하게 우경화 색채를 띠기보다 역대 정권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속선상에서 일본의 정권, 일본의 정치를 바라보는 방
법입니다.

이성현 사실 일본은 특수하게 다루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 수상이 히틀러 표에 참배했다고 가장해
봅시다. 그런 우리는 그것을 독일 집권세력의 우경화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전후 독일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치지도자들이 전범들에게 참배한다
는 것은 개인에 대한 애도의 표시가 아니고, 수많은 전쟁주도자들을 향해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가 내포되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우경화라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자기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
들에게 참배한다면 굳이 나무라거나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수 차례 전쟁범죄를 저지른 전역
이 있는 나라이므로, 전 세계인들이 일본을 특수하게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인들만 유난스럽게 비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박홍영 역은리 역시 성립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천황의 사과발언이나 역대 수상들의 사과발언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라는 것입니다. 즉 역대 수상 중 한 사람이 참배하는 것이나, 역대 수상 중 하나가 사과하는 것, 무슨 차이
를 찾을 수 있었습니까? 저는 일본이 우경화한다. 또는 아니더라는 진단을 내릴 때 가장 염려하는 측은 인
근국가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우경화하면 프랑스를 비롯한 이웃이 관심을 가지게 되지. 멀리 떨어진
곳은 그저 최소한의 관심을 기울일 따름입니다. 일본의 우경화는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겹쳐서 나타
나는 현상인데,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다소 성숙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
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자 우경화, 아니니 하는 문제를 떠나서 최근 자민당과 고이즈미 정권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저 대중매체를 통해 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류진준 제가 보기에는 일본국민들이 군국주의에 달아있는 움직임으로부터 무엇인가 만족을 느끼고, 일부는 상당한 향수에 젖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만 해도, 일본 공립학교에서는 채택률이 불과 1%미만이었다고 하지만, 서점에서는 꽤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고이즈미 총리가 외부비난을 무릅쓰고 신사 참배를 강행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여론이 지지하기 때문이거든요. 얼마 전 백두산에 갔을 때 60대 후반의 일본인이 천지를 바라보며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반세 부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고토를 확인하려는 잠재육구가 여과 없이 솟구쳐나옵니다. 아무튼 21세기 일본은 패전국이면서도 처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 경제재건에 성공했지만, 주류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세계시민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진준 교수

공격성의 근원

시희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 지배세력은 전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분명하지 못했던 전후처리의 수혜집단이지요. 그런데 요즘의 일본사회를 곰곰이 살펴보면, 독일 파시즘 등장배경을 분석한 프롬의 글이 생각납니다. 사실 최근 이시하라 동경 도지사, 고이즈미 총리, 자민당 내 무파는 어떤 경우든 국익에 반하는 외부요구에 대해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 되자고 외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강대국을 상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힘을 과시하는 대상은 주로 지배했던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어떻게 봐야 하나? 공격성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박홍영 심리학적으로 보면, 프롬식 추론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속성상 패권을 지향하는 경향은 어느 국가나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예외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도 패권국가가 될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변국들을 침략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한민족은 순하고 어질기 때문에, 또는 평화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본민족은 잔인하니까 무슨 짓이든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우경화되고 있다는 해석 대신 패권국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더 본질에 가까운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속성이란 패권화하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민족은 악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주 피해의식을 가지고 일본인은 항상 어떻게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실제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저 한발 떨어져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성환 패권국가라는 용어는 좋습니다.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든 힘을 과시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과연 현 단계에서 일본이 패권국가화 하려는 의도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비등하고 있는 우경화 흐름은 국가주의와 직접시켜서 생각해두 무방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의 우경화가 특색한 시기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치 말기, 1930년대, 1950년대, 그리고 20세기말부터 지금에 이르는 기간이지요. 그런데 이 시기들은 일본이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했을 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1930년대에는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고, 1950년대에는 냉전 중 좌파의 위협이 극심하

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경제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일본의 국가주의 혹은 우경화를 얘기할 때 대내적인 억압체제와 대외적인 팽창주의를 지적합니다만, 대내적인 억압체제라는 것은 국가개조를 위한 통제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대외팽창을 지향하게 되는데, 이때 팽창은 주로 아시아를 겨냥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회개혁이 부진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즘 현상은 우경화의 성격이 강하며, 그 기저에는 자신감 상실에 따른 반작용이 자리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진춘 두 분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일본은 1980년대까지 경제대국에 걸맞는 몸집과 힘을 키웠는데, 국제정치적인 차원에서 똑같은 대접을 받기는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 걸프전 때 1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달러를 투입하고도 국제사회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비난을 들었을 때 무척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쓰라린 경험이 이시하라식으로 표현되면서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인을 만들어냈지요. 간절히 바라는 자신들의 미래상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1990년대 말부터 경제가 침체를 맞으니 심리적 위축감을 달리기 위해서라도 우측 극단을 향해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좌측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일본 우익집단의 이념

사회자 이제 논의의 방향을 조금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사회의 우경화 또는 패권국가화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은 보수적인 정치·경제엘리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행동철학이 되는 이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성환 일본의 우경화를 이끄는 우익집단의 이념을 간단히 정의하면 국가주의입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일본의 우경화는 민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지식인들이 이론을 정립하고, 그것이 다시 국가기구에 침투하게 되는 것이지요. 최종단계에서는 사회전체가 우경화에 휩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1990년대 이후의 우경화를 보면,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과거역사를 재론하는 주변국에 대한 민간의 반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익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사관 역사연구회가 결성됩니다. 자유주의 역사연구회라는 것이 뭘니까? 바로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연결되는 단체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본역사를 좀더 자유롭게 해석하자, 스스로를 가해자로 여기지 말자는 억지입니다. 대동아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요, 자유전쟁이었다는 식입니다. 이러한 이념, 즉 국가주의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정치인이요, 크게는 국가입니다.



이성환 교수

류진춘 저는 국가주의와 천황제의 결합을 주된 이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왕은 신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백아더에게 항복하면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하시모토 정권 아래서 일본 왕을 다시 신격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여론도 이를 원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을 결속시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국가주의와 천황제, 그리고 우경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홍영 저는 다시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류하자면, 영국이나 프랑스는 국제정치 영역에

서 선발민족주의 주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부 민족주의가 싹트면서 우익이 됩니다. 반면 후발민족주의는 영국이나 프랑스에 대해 피해의식을 가진 나라들이 이에 대항하면서 나타난 것인데, 독일이나 일본에서 힘을 발휘했지요. 그럼 한국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제국주의 세력의 억압하에서 성장한 저항민족주의로 분류됩니다. 이 셋 중 민족주의는 모두 우익이예요. 여기에는 좋고 나쁜 것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언제부터 우익의 색이 자라났는가? 이성환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일부 학자들이 국학을 만든 동기와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학은 그들이 말하는 일본학입니다. 그들은 국학을 이론적으로 정립해서 국체를 만듭니다. 국체는 영어로 national essence라 불리지만, 정확한 영역은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그저 일본민족을 하나로 묶어야한다는 것, 통합해야한다는 것, 그리고 결합의 매개와 상징으로 천황이 동원되는 것이지요. 종합해보면, 일본 우익의 바탕은 국체정신이요, 지향하는 바는 천황중심 국가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정치집단들은 대부분 이러한 이념을 신봉하는 우익인가?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민당 내부나 일본사회 전반에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어울립니다. 확실히 구별하고 대응해야겠습니다.



박흥열 박사

일본의 우경화가 동아시아 질서에 미치는 영향

사희자 이 부분을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볼까요. 최근의 일본 움직임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관계없이 자위대전력 증강, 역사재해석,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 노력은 적극적으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이 점차 동아시아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리라고 보십니까?

류진준 사실 한국과 중국이 교과서 왜곡이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다같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공동대응을 모색했지만, 결국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은 일본의 경제력이 필요하고, 그 밖의 아시아 국가들 역시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 어느 정도 외환위기를 극복했다지만, 여전히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 과연 일본의 우경화에 과감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일본 엘리트들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공세를 취하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점차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로 확장되리라 봅니다.

이성환 일본 국가주의는 대외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리더십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아시아 맹주론이지요. 만일 이것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나설 때는 패권다툼이 거세질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싸움이 될 테지요. 과거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나라, 가장 싫어했던 나라, 가장 적대적이었던 나라는 소련이었습니다. 그랬던 일본이 최근 자위대 재편성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러시아 극동군사력이 1/4로 축소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소련은 침몰하고 말았으니,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결국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 패권을 다투는 상황, 대충들이 예상됩니다.

박홍영 저 역시 일본 우경화, 국가주의화가 진전될수록 아시아의 불안정은 더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이 위협하다고 해야겠지요. 중국이 교과서 왜곡문제를 두고 한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은 것도 충분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중국은 100년 전 중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회주의혁명을 통해서든 어떻든 차근차근 대비해왔어요. 이런 점에서 일본의 우경화가 급속히 진행 되면 우리 민족의 안전이 위태로워진다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대응방안

사회자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보면, 일본의 우경화를 대하는 입장이 연령이나 세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일본의 팽창에 맞설만한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일본의 움직임에 대응하자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홍영 당연히 우리 사회가 내실 있게 준비해야겠지요. 구체성 없이 외치는 소리들은 모두 일회성이고, 일종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미친개한테 물리지 않으려면 개를 잡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할 것 아닙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너 왜 미쳤느냐고 달려드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시민운동단체, 학자, 정부가 제 역할을 다 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역사학계는 반성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직성도 문제입니다. 그저 하나만 인정합니다. 군사주의지요. 무작정 목소리를 높인다고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지지와 동정을 보내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란 냉정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제부터라도 다양한 분야, 다양한 시각을 통해 차근차근 힘을 길러나가야겠습니다.

이성원 저는 항상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최근의 일본 움직임을 우려하고 비판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앞에 닥치는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제시되는 해답이 힘을 키우자, 미친개를 잡으려면 힘을 길러야한다고 하지만, 그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강대국들의 뜰바구니에서 쉽게 힘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생존방법은 무엇인가? 외교력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유연하면서도 현실적인 사고로 무장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면, 정치적인 문제와 다른 분야들을 별개로 다루면서 접근해야겠지요. 일본이 강하게 나오자, 대중문화 개방을 철회하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라 여겨집니다.

류신준 저는 우리 사회의 다원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토론과정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일본 사회에는 우경화, 국가주의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우리 내부의 기반이 너무 허약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민사회·정당과 일본의 우경화 반대집단들이 협력을 통해 견제세력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내부적으로 만들어가야지요. 그러자면, 폐쇄적인 틀을 벗고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마련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다원화·민주화되면 외부 공격에 대응하는 힘은 저절로 강해질 것입니다.

사회자 최근 일본사회의 보수적 움직임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 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역량을 갖추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차근차근 갖춰 나가야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구·재정만을 이유로 한 행정구역 조정은 반대한다

황대현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머리말

대 구시가 지난해 용역 의뢰한 행정구역 조정안이 지난 6월말에 이어, 8월 10일 지역 특정언론에 보도되다가 8월 17일에 대구시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언론에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태어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조정안 중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달서구의 두류 1·2·3, 감삼, 죽전동과 장기동 일원을 서구로, 성당 1·2동, 송현 1·2동을 남구로 각각 편입시킨다는 내용이다. 달서구의 인구가 60만 명에 육박하여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와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가 너무 커 도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조정 필요성의 근거이다. 언뜻 생각하면 그와 같은 주장이 합당한 것처럼 들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행정수요는 반드시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 또한 대구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대해 인구수와 재정문제만을 이유로 조정코자함에 따른 논리의 부당성, 구역조정의 대안, 우리 구의 현안과 장기계획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인구·재정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자치단체의 구성요건은 구역의 역사성, 주민의 공동체의식과 귀속감, 주민의 동질성 등이 그 기본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치논리나 인구·재정적인 측면만을 고려해 조정하게 되면 수년 내 또다시 그와 같은 이유로 재개편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과 주민들의 혼란만을 초래하는 시행착오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미 100여 년 전에 현대적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였던 이웃 일본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이 3,229개에 달하고, 그 중 시의 숫자가 671개에 달할 뿐 아니라, 인구 규모에 있어서 요코하마시처럼 인구가 300만이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동경에 있는 오가시마촌처럼 인구가 200명도 안되는 곳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는 역사성과 동질성에 바탕을 두고 행정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행정편의를 이유로 분할하고 합병하는 사례는 없다.

우리 달서구는 오랜 역사와 전통성을 가진 지역이다. 우리 지역은 청동기시대 주거지역으로 마제석검, 입석 등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기원전 7세기경부터 취

락을 형성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6세기초까지 낙동강변의 가야문화권에 속했고, 신라시대에는 달불성(達弗城)이라 불리었으며, 1910년 대구군(郡)을 대구부(府)로 개칭하면서 달서, 성서, 감물천, 조암, 월배, 인흥면 등 6개 면으로 분할된 바 있다.

달서구는 1938년 10월 1일 대구부에 편입된 달서면을 모태로 하고 있다. 1981년 7월 1일 대구시의 직할시 승격으로 행정구역이 확장되면서, 현재 달서구의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는 달성군 성서읍과 월배읍지역이 성서출장소와 월배출장소로 도시형 체제로 바꾸어 서구와 남구에 편입(귀속)되었다가, 1988년 1월 1일 서구 내당동 일부와 성당동, 성서읍 전역과 월배읍 전 구역을 서구·남구로부터 환원받아 이를 하나로 묶어 대구의 일곱 번째 행정구로 신설, 승격되면서 독자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성서·월배지역이 행정구역상 서·남구에 잠시 속해 있었던 것은 대구가 개발화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기탁(일종의 명의신탁) 되어 있었던 것이며, 달서구의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는 성서읍과 월배읍 지역은 수백년 동안 토착주민들이 대를 이어 살아왔고, 지금도 일부 지역은 자연부락 중심으로 전통을 유지하며 살아오고 있어, 대구의 어떤 지역보다도 구역과 주변의 동질성, 정체성이 강한 곳이다.

지난 8월 17일 대구시가 발표한 소위 행정구역 조정 용역 성과품의 내용을 보면, 시가 과연 대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과거에는 행정구역 조정시 산맥·하천·도로 등 자연지형을 기준으로 하는 등 일정한 원칙이 있었으나, 이번의 조정안을 보면, 먼저 결론을 도출해 놓고 소위 전문기관의 이름을 빌려 인근 서구만을 키우기 위한 폐맛추기식 조정안으로밖에 볼 수 없다.

성과품에 의하면 구역조정을 위한 기준설정에 있어

인구 10만 이하인 자치단체나 30만이 넘을 경우 규모의 불경제로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고 기술하고 있고, 개발수요에 대한 공간 구조, 인접성, 동질적 생활권, 인구규모, 재정능력, 역사적 동질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인구편차 해소 이외 어떠한 사항도 고려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앞서 기술한 인구 10만 이하와 30만 이상이 될 때 효율성이 낮다고 예측하면서도 성과품 역시 30만 이상인 구가 대구전체 8개 구·군 중 5곳이 되는 모순을 범하고 있으며, 서구는 가히 파격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전국 7대 대도시 자치단체의 인구분포를 보면, 74개 자치단체 중 인구 10만 이하가 8곳, 30만 이상이 39곳이나 된다. 심지어 50만 이상인 자치단체도 7개에 달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치단체는 모두 비효율적인 자치단체인가 반문하고 싶다.

금번 대구시가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어 발표한 것은 250만 대구시민에 대한 공식발표임에도 웬지 발표내용에 자신이 없어 보인다. 시는 발표자료에서 '주민 집단반발이나 기초자치단체, 의회간의 합의나 조율이 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용역(안)과 같은 행정구역 조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적고 있다. 시 스스로도 이번 조정안이 합리적인 안이 아니라는 것을 의식한 듯 보인다.

대도시 구간의 인구편차는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며, 재정문제 또한 행정구역 조정의 요인으로서 설득력이 없다

대구만의 경우 우리 구가 7월말 현재 595,807명으로 중·서·남구의 합친 인구인 586,384명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를 포함 6대 대도시 또한 같은 실정이다. 심지어 행정동인 부산 해운대구 좌동은 인구가 103,383명으로 민선자치구인 부산광역시 중구, 강서구 인구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를 제외한 어느 자치단체도 인구수를 문제삼아 구역조정을 거론하는 곳은 없다. 다만 과거 달서구 감삼동과 서구 증리동 일원의 경계선이 불합리하여 조정했던 것처럼 구간 경계선이 불합리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정을 검토하는 예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누가 제기하지 않더라도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당연히 그리고 즉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특히 대구시 남구가 재정력 확충을 이유로 편입을 주장하고 있는 성당·송현동의 경우 각종 교부금을 포함한 연간 세출예산총액이 세입예산총액을 9억 원이나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인구를 기준으로 구역을 조정코자 한다면 구역조정을 함으로 해서 또다른 빈약한 자치구를 만들기도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 추세에 맞게 파소구를 통·폐합하는 것이 경영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대구시의 중·서·남구를 합쳐도 달서구의 인구에 미치지 못하나, 그 가운데 중·남구의 통·폐합은 지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며, 중구의 대봉·남산동이 과거 남구에 속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합리적일 것이다.

달서구의 공무원 정원이 동을 포함 807명이고, 중·남구의 통합 정원이 1,212명에 달한다. 동사무소 정원(달서구 214명, 중·남구 합 215)을 제외하고, 구본청, 보건소, 외화인력을 달서구와 중·남구 통합정원과 비교할 때 감축 가능한 인력이 404명에 달해 이 경우 연간 130억 원 정도의 인건비 절감도 가능하다.

일부에서 행정구역 조정의 이유로, 달서구의 인구가 과다함으로 인해 편향발전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달서구로 집중되어 대구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시각은 타당성이 없는 논리이다

달서구는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기초단체 중 인

구규모로는 서울 송파구·노원구에 이어 세번째로 큰 자치구이다.

서론 부분에서도 언급했지만, 행정수요는 반드시 인구수와 비례하여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달서구는 일반주택지역보다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동주택(APT)의 비율이 72%로써 대구시 평균 46%를 크게 상회한다. 제증명 발급 등 인구수에 따라 많아질 수 있는 단순민원은 민원온라인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행정조직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그러한 문제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실제로 달서구는 성서지역에 민원분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성서택지개발지구 중심지에 이동보건소 거점인 성서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볼 수 없는 현장민원해결팀을 발족시켜 주민 불편사항을 기동성 있게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 불편 사항의 즉시 해소와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주민들의 호응과 격려를 받고 있다.

실제로 '96년부터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지금까지 달서구는 매년 최우수자치단체, 지방자치경영대상수상 등 권위 있는 민·관·학계로부터 앞서가는 선진자치구로 평가 받아왔다.

국·시비 보조금이 달서구에 집중 배정된다는 주장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경로연금, 장애수당 등의 사회복지 수혜대상인 영세민이 타구에 비해 월등히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하지 않고, 이를 단순 비교함으로써 빚어진 오해일 뿐이며, 시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조정교부금 또한 인구수를 포함 가구수, 면적, 공무원수 등 23개 항목에 근거하여 보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한 달서구의 기본구강과 방침을 소개하고자 한다. 후자는 금번 제기되고 있는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해 마치 구청장이 내용불문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처럼 흘러고 있으나, 이는 다분

히 구역개편론자들의 의도적이고 자위적인 추측에 불과할 뿐이므로, 필자는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구역 조정 내지는 분할·폐지에 관한 철학을 가지고 임하려 한다.

첫째,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인구·재정만을 기준으로 한 인위적인 행정구역의 축소 조정방침에는 동의할 수 없으므로 절대 반대한다. 앞서도 충분히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재론하지 않겠으나 경계가 불합리하다거나 주민불편 사항이 이유가 아닌 단지, 인구·재정편차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조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적인 문제 접근으로 인해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전국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구는 구역의 역사성, 주민공동체외의·귀속감, 주민동질성과 정체성 등이 인구·재정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구역(자치구역)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당연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 실례로 지난 '94. 10월 달서구 감삼동과 서구 중리동, 내당동의 구분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경계를 조정한 바 있고, '97. 12월에는 당시 조정에서 누락된 지역 19세대에 대해 경계를 조정코자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조정치 못한 바 있다. 앞으로 이 지역을 포함 과거 하천부지와 논밭을 경계로 이루어져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우리 구의 송현 1동 매자골 일원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때 우선 조정할 것이다.

셋째, 분구(자치구역 분할) 문제는 우리 구로서는 꼭 풀어야 할 현안과제이므로 정부와 주민의 동의하에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구청장으로서도 여건이 허락하면 지금 당장 시행하고 싶은 과제이다. 다만 현시점에서 분구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시기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지난 95년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정부는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군 통합, 도·농 복합형태의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를 추진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도 광역자치단체 분구 대상을 50만 명 기준(서울특별시 70만 명 기준)으로 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이 또한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는 광역시의 자치단체 분구 또한 잠정적으로 70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분구 기준을 70만으로 할 때 규모의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1개 구의 적정규모를 35만 내외로 볼 수 있어, 최소한 35만 이상일 때 인구·재정적 측면에서의 손익 분기점을 형성할 수 있어 행정의 능률성, 효율성, 서비스의 질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의 논리에 의한 분할에 앞서 해당 자치구의 장기비전, 중장기 계획과 준비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적으로는 공공부문 2단계 구조조정 과정에 있으므로, 우리 구가 분구시 동 인력을 제외한 구 본청 인력 500여 명의 순증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경찰·소방인력 또한 행정인력에 상응한 증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구조조정 시행도 난관에 처한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서 대구광역시와 제정여건 또한 지하철 2호선 공사의 마무리와 지구촌 최대 축제라 할 수 있는 2002월드컵준비, 200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구가 분구될 경우 양분되는 인구가 각각 30만 정도에 달하게 됨으로 현 서구(284,092)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다. 현재 서구는 경상 경비를 제외하면 자체 투자를 위한 여유가 적어 국·시비 보조 사업과 융자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위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인구 30만명은 적정규모에 미달됨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 달서구는 아직도 투자해야 할 곳이 너무나 많다. 성서대생활권은 두류동의 주거환경개선과 성당동 일원의 노후부락 개발, 성서택지지구 제척지인 선

원·사령봉 인근을 비롯, 광역시 편입 이후 아직까지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파산·과호동의 개발 등, 개발해야 할 곳이 잠재되어 있다. 월배대생활권 역시 월배·도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달서아파트지구 저층아파트단지의 재개발과 진천동 일원의 개발, 시가화가 오래된 본동, 송현동 일원의 개발 등 개발수요가 너무나 많다.

달서구는 이러한 양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선초기인 지난 '96년 계획기간이 10년인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고, 이 계획의 완성시기가 2006년도이다. 이러한 계획추진이 가능하게 된 데는 광역규모로 인해 얻어지는 인건비와 각종 경상경비의 절약에 의한 전환투자금액을 그만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환경 여건으로 인하여 성숙된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분구를 한다고 가정해도 재정력이 부족하게 되어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어 또다시 오랜 세월동안 미개발지역이 주민숙원으로 남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달서구의 장기비전인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지금부터 착실히 대비하여 분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행정구역(자치구역) 조정 내지는 분구(분할)에 대해 국내외 현황과

여건, 달서구의 기본방향을 나름대로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해, 행정구역 조정은 인구·재정에 의한 인위적인 조정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며, 구역의 역사성, 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귀속감, 주민동질성이 그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구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결집된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달서구는 이미 지난 96년 구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기본계획을 세우고, 재정·인구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인 2006년쯤 성서대생활권과 월배대생활권을 성서구와 월배구로 분구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권 균형개발에 힘쓰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 시기를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준비작업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함과 아울러 대구광역시, 행정자치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내실 있게 대비해 나가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지도자와 주민, 구의원, 시의원,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의견 등을 다양하게 결집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착실히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지금은 국가와 지역 모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이다. 신중한 현안해결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 행정구역조정 문제가 우리 고장 대구만의 현안으로 부각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재조정 방향

김연기 | 대구대학교 교수

서론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흐름은 우리의 지방행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도 이에 따른 합리적 대응책 마련을 재촉하고 있다.

우선 지방화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적절한 역할분담 그리고 정부와 민간부분의 기능분담을 통해 국가경영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중앙권력이 분산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걸쳐 탈집중화가 일어나고, 주요 자원 접근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었던 지방이 이를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지방화의 핵심이다.

세계화(globalization)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각 분야에서 국가간 경쟁과 협력, 상호의존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대조류를 말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시공간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가 하면, 자본과 상품이 국가장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세계화가 급진전될수록 지방의 활동공간은 넓어진다. 전지구적 차원의 기구들과 고유한 특성을 가진 지방이 상호작용 관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정보화는 유연성을 뒷받침한다. 뚜렷이 고정된 것이 없는 정보화시대에는 조직도 위계의 틀을 벗고 유연하

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도 지역과 지구촌 문제들에 주목하면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재구성해야 한다. 정보화는 조직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변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문제해결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행정구역 적정화는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행정구역의 의의와 성격

행정구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 또는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공간이며 주민의 일상생활, 즉 정치, 경제, 문화 등 각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행정구역은 소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며, 적극적으로는 그 범위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영업소를 둔 주민, 그리고 해당구역과 일정한 장소적 관계를 가진 물건(物件)을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에 복종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한편 행정구역은 공동사회적 기초를 가지는 동시에 능률적인 행정운영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 전자는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요건이요, 후자는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일반적으로, 지방행정구역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오랜 주민생활의 터전이자, 공동체意識의 단위인 것이다. 일단 설정된 구역은 시일의 경과와 더불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주민 예찰의 대상이 되면서 점차 고정화되어 간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구(군)별 행정구역 적정화 여부는 정치·경제·역사적 배경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각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여건이나 주민생활의 편의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뿌리 내리고 있는 역사와 전통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공공문제 및 행정수요 해결에 가장 적합한 규모를 찾아야 하는 셈이다.

행정구역 적정화의 목표와 기준

1. 행정구역의 적정규모 설정에 관한 선행논의

행정구역의 적정규모(optimum size)를 설정하는 기준은 국가나 사회의 역사적 전통, 경제·사회적인 특수성 및 정치·행정의 발전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국내외 학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조건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이 편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간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생활권과 일치되어야 한다. 주민들간에 형성된 경제·사회·문화적 연대관계를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셋째, 적절한 인구규모를 가져야 한다. 물론 행정능력이나 관할범위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재정적 자립이 가능한 규모여야 한다. 최소한 자치단체가 유지되려면 재정자립의 기틀을 이룰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행정구역개편의 방식과 절차

1) 행정구역 개편의 방식

행정구역 개편방식으로는 경계변경(관할구역변경)과 폐지분합 및 규모재편(전면적 재구획) 등을 들 수 있다. 폐지분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것으로 폐지는 하나의 단체를 폐지하여 다른 단체구역에 편입시키는 것을 말하며, 신설은 하나의 단체의 구역의 일부를 떼어서 새로운 단체를 설립(예: 읍을 시로 독립)하는 것이며, 분립은 하나의 단체를 폐지하여 수개의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고, 합병은 둘 이상의 단체를 병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뜻한다.

규모재편은 구역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다시 획정하여 재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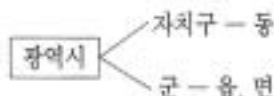
2) 구역개편의 절차

구역개편에 있어 구역적정화의 요건에 충족했는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행·재정적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망라한 「행정구역조정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 해당주민들의 동의와 협조하여 해당 구의회 의의견수렴—시의회의 의의견수렴—행정자치부에 건의 조정안 및 법령안 작성—법제처 심의—국무회의의 상정—대통령의 재가 및 대통령령으로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실무조정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현행 광역시의 자치행정 계층구조와 주요 지표 현황

현행 지방자치행정 계층구조는 자치 2계층을 기본으로 하고 비자치행정계층이 특별시·광역시 경우 1계층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2계층, 통합시의 경우 도시지역은 1계층, 농촌지역은 2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읍·면·동은 하급행정 보조계층임). 1997년 12월 31일 현재 군을 기초자치단체로 보유하고 있는 광

역시는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인천(강화군·옹진군), 울산시(울주군) 등이다.



각 계층의 행정구역 설치 및 조정에는 인구규모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광역시 승격의 경우 통상 인구 100만 이상인 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특별한 법적 요건은 없다.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두도록 되어 있고, 군 설치에 관해서도 특별한 법적 요건이 없으며, 일반 구의 경우 시 인구가 50만 이상일 때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의 지위와 기능을 요점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기초자치단체와의 의사유통·협력관계 유지를 통한 광역행정기능을 수행한다.
- ②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으로 처리 곤란하거나 비경제적인 사무에 대해 보완·대행기능을 수행한다.
- ③ 중앙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의사유통·관할구역 내 기초단체 사이의 행·재정상의 불균형 시정 등 연락·조정기능을 수행한다.
- ④ 기초자치단체와 대등한 공법인이지만, 국가사무처리상, 국가행정조직상 계층관계를 갖고 소속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휘·감독기능을 수행한다.

1997년 3월 1일 현재 전국 자치구의 평균면적과 평균인구는 각각 46 km², 330,312명인데, 최대면적(대구 달성군 427.03 km²)과 최소면적(부산 중구 2.79 km²), 최대인구(서울 송파구 668,579명)와 최소인구(부산중구 63,215명) 간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최소면적(중구 7.08 km²)과 최대면적(달성군 427.03 km²)은 60배에 이르고, 최대인구(달서구 558,546명)와 최소인구(중구 91,880명) 차이도 극심하다.

(표 1) 대구광역시 구(군)별 면적, 인구, 공무원 수, 공무원 1인당 주민수

(2000년)				
	면적 (km ²)	인구수 (명)	공무원 수 (명)	공무원 1인당 주민수(명)
중 구	7.08	91,880	626	153
동 구	182.36	338,052	774	440
서 구	17.51	283,197	703	417
남 구	17.45	196,286	623	323
북 구	95.46	409,353	808	500
수성구	76.45	459,658	765	602
달서구	62.27	558,546	820	696
달성군	427.03	154,281	668	210
계	885.61	2,524,253	5,787	

행정능력의 지표 가운데 하나인 각 구청별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1999년 기준으로 볼 때는 중구가 153명으로 가장 적고, 달서구가 696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의 구(군)별 재정능력을 알 수 있는 지방세입 현황(종합토지세,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대구광역시 구(군)별 지방세입 현황(1999)

(단위: 천원)				
	종합토지세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중 구	11,291,207	917,715	3,354,455	908,776
동 구	7,024,561	2,367,797	4,355,966	1,305,595
서 구	10,478,814	1,956,742	8,136,572	2,190,814
남 구	4,703,296	1,379,812	2,898,431	353,651
북 구	7,904,922	3,015,839	6,132,022	1,709,425
수성구	9,383,758	3,579,940	8,834,262	1,383,052
달서구	10,519,959	4,206,271	9,779,349	3,237,042
달성군	3,360,902	410,116	2,225,914	1,887,417
계	66,477,419	17,834,232	45,716,971	12,985,772

지방세입 중 종합토지세의 경우 비교적 중심지에 가깝게 위치한 상업지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구(군)별 차이가 크며, 면허세와 재산세, 사업소세 등은 구(군)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행정구역 재조정의 방향

대구광역시는 같은 생활권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역사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대구시는 광역시가 될 때까지 행정구역 설정에 있어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1985년과 1963년의 지역변경, 구(군)제 실시 등에 따라 수성구와 달서구를 신설하는 등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적인 경계조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제는 도시전체 기능향상을 위해서나, 주민서비스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에 나설 때이다. 특히 중구나 서구, 남구 등 중심지역의 자치단체들은 토지개발, 교통여건 개선, 산업개발 등 여러 측면에서 더 이상 물리적인 공간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정방향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관련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현행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전체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생활권 중심의 도시와 그 배후지를 통합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기능적 공간체계에서 중심도시와 배후지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 앞으로 급속한 교통수단 발달과 산업고도화가 공간적 이동성과 입지적 상호작용을 가속화하면서 중심지와 배후지간 기능적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도(道)의 구역조정이 요구되므로,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한다.

셋째, 생활권 범위와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야 한다.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가능하면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외부효과를 적극적으로 제어할 수 없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적 연관성과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적 지역단위인 생활권이 지방자치단체 영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넷째, 자치단체간 행·재정적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구역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우선적으로 구(군)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경계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1C 무한경쟁 시대에 자치단체가 능력을 축적하고 체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재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이 다방면에 걸쳐 검토되어야 하며, 대도시 중심지인 도심의 공동화현상, 대도시전체의 행·재정적 불균형,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그리고 이에 따른 도시전체의 경쟁력약화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사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난 1995년 민선자치출범 이후 대도시 도심공동화 등에 따른 구(군)간의 인구격차와 재정불균형으로 인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합리적인 행정구역 재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구역 재조정은 각 분야에 걸친 환경변화의 대불어 검토되어야 하며, 거시적인 변화에 속도 병행되어야 한다. 구(군)간의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각 분야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자유로운 토론회에서 합의형성을 실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극심한 대립과 대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구역 재조정은 미래를 위한 지역적 준비작업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치밀한 계획과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거쳐 치우치지 않는 답을 구해내도록 해야 한다.

대구시 행정구역 조정안 살펴보기

김석태 | 경북대학교 교수

과거 전통적인 구역개편 방식은 분리(分離)였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도(道)로부터 광역시가 분리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읍이 시로 승격하여 군에서 분리되든지, 아니면 기존의 구를 나누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분리방식은 94년 시·군 통합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차츰 구역 통합(統合)이나 조정방식으로 대체되었다.

분리방식 하에서의 구역개편은 그 자체가 경사이었다. 보통시가 광역시로, 읍이 시로 승격하는 것은 지역발전의 계기였고, 구가 나누어지는 것도 그 자체가 지역발전의 징표였다. 행정기구가 새로이 생기거나 확대됨으로써 공무원들도 이를 받았다. 분리의 경우 모태(母胎)가 된 도나 군의 세가 약해진다는 점에서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근래에 나타난 통합이나 조정의 방식 하에서는 그 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분리의 경우와는 달리 지역간의 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축소지향적인 구역개편을 좋아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94년과 그 이후에 추진된 시·군통합의 경우 상당한 진통을 겪은 지역이 많다. 시·군통합과 같이 상호 호혜적인 구역개편도 이러한 반대급부가 없이 일방적으로 떼고 붙이는 식의

구역획정이 더 어려울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대구시는 자치구간의 구역조정안을 놓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대구시의 의뢰로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용역직업을 수행해 온 한국행정연구원이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게 제출한 개편안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이 문제가 대구 사회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치구역문제와 관련된 약간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구역조정(안)의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조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구역의 의미부터 시작한다.

행정구역과 자치구역

구역은 법적 성격에 따라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으로 구분된다. 자치구역은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이며,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행정편의나 특정한 행정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설정한 지역적 범위이다. 우리의 경우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구역은 자치구역이고 행정구나 읍·면·동의 구역은 행정구역이다. 자치구역의 경우에는 행정구역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시·도와 시·군·구는 자치구역인 동시에 행정구역이다.

자치구역은 흔히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지역공동체는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의 터전이며, 이것이 자치단체로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지방정부로서 정치단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자치단위는 단순한 행정단위가 아니다.

따라서 구역개편과 관련해서도 행정구역과 자치구역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행정구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편의상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이 의사대로 개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구역의 경우 자치단체의 주인인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개편은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아직 행정자치부나 상급자치단체에서 자치구역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아직도 행정단위 정도로 보는 관치(官治)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치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실익

구역개편의 필요성은 거창하게 포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대구시의 자치구역 개편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는 자치구 구역개편의 필요성을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를 앞장서 개척하기 위해선 백년대계를 내다 보는 무형의 인프라인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지방자치의 계층구조 및 자치구역 개편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지역이 개발되고 또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는 반면 기존의 지역은 새로운 사회·경제환경에 따라 쇠퇴하기도 한다. 교통·통신이 발전하면서 종래의 공간적 거리는 축소되고 또 그 의미 자체가 희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역이 적절히 개편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역문제 그 자체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백

년대계를 내다보는 무형의 인프라인 행정구역'이거나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자치선진국들의 경우 역사적으로 형성된 자치구역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의 경우도 자치구역의 기본인 도의 경우 수백 년 전에 그들이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 행정비용 절감과 재정상태 개선, 광역행정의 효율적 수행, 도시와 농촌간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등 온갖 수사를 동원하여 추진한 시·군통합의 효과가 무엇인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역조정의 기준

주민들이 스스로의 의사로 자기살림을 꾸려가는 단위의 자치단체의 공간적 범위인 자치구역은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주민들이 스스로의 살림을 사는 데 그들의 의사의 결집을 용이하게 하는 단위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공동사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것을 존중하여야 한다. 자기 살림을 사는 데에는 재원의 조달능력과 또 살림살이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적정한 구역 규모가 요구된다. 그 외 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접근이 용이한 동시에 지방정부를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규모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국내외 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는 구역개편의 기준은 대체로 공동체 사회의 유대감(주민들의 동질성과 일체감), 주민의 편의와 선호, 자주 재원, 행정의 능률성, 주민참여와 통제 등이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국가가 상급자치단체 기준에서 볼 때 지역간의 형평성(인구, 면적, 재정)이다.

그러나 구역 개편에서 이런 기준들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많은 경우 기준들이 상호간 상치되기 때문이다. 공동사회라는 기준을 우선하다 보면

구역의 규모가 적어지기 마련인데, 이 경우 자주재원 확보가 어렵거나 행정의 능률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원칙간의 조화가 필요한데 베일리(S. J. Bailey)는 '지방정부는 규모의 경제에서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 행정구역조정]에서 이용한 기준을 살펴본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를 위해 특히 지역내 관련분야 학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134명을 상대로 설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한 뒤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구역조정 기준과 관련해서 인구·면적·행정·재정적 격차의 완화가 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24%, 행정의 효율성 18%, 효과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한 규모 12% 등의 순이었다. 이를 근거로 연구원은 △인구 및 재정격차의 완화 △생활권과의 일치 △행정효율성 확보 △역사적 동질성 확보 △실현 가능성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첫째 기준인 인구·면적·행정·재정적 격차의 완화, 즉 지역간 형평성이라고 볼 수 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가 다음에 나와 있지만 생활권이라는 것은 원래 매우 다양하여 어떤 생활권이 기준이 되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개편안에서 지역간 인구 및 재정 능력 등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라고 밝히고 있다.

개편(안)과 관련한 이슈들

대구시 구역개편과 관련한 인구·면적·행정·재정적 격차의 완화라는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다. 이런 의문들은 개편의 기

준, 자치구에 대한 시각, 다른 광역시와의 관계, 그리고 구역조정(안)의 부수효과와 추진과정에 관한 것이다.

1) 인구 격차의 완화

조정안에서 현행 대구시 자치구역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에 위치한 중구, 서구, 남구는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는 반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신개발 지역인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급격한 인구증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심구에는 행정력이 남아도는 반면 신개발 지역에선 부족한 실정이며, 행정구역도 도심구는 좁은 반면 외곽지 구·군의 경우 지나치게 광활하며 발전잠재력도 풍부한 편이다.

확실히 행정구역의 규모가 비슷해지고 지역의 재정력이 비슷하면 재정조정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본권화가 용이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개편안은 지역간 인구 및 재정능력 등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구규모와 관련, 기초단체들 중 40만 명이 넘으면 축소시향의 경계조정을, 그 이하인 경우엔 확대시향의 조정을 시도하고, 조정후의 인구 목표치는 최소 10만에서 최대 50만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해 둘 것이 있다. 첫째, 모든 구간에 인구수와 재정능력을 비슷하게 하지 않고 왜 10만에서 40만이란 엄청난 차이를 두는 것인가이다.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은 현재 자치구의 평균 인구인 34만 명 정도로 하여 인구수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개편안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장래의 지역발전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한다면 인구수를 중구나 남구의 경우 평균이상으로 하는 반면, 달서구나 북구의 경우 평균이하로 하는 구역개편 방안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수년 내에 또다시 구역개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2) 자치구의 정체성

자치구는 우리의 자치단체 중 가장 늦게 그 지위를 인정받았고 아직 자치단위로서 그 가치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자치구는 시·군이나 시·도에 비하여 그 역사가 짧고, 주민간의 공동체 의식이나 연대의식이 약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자치구는 1988년 자치단체로 인정된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그 기간만으로도 지역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있다. 또 이 기간 중 지방의회 구성과 단체장 민선, 지역 축제 등은 지역공동체 의식 강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성과 동질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행정편의를 이유로 분할, 합병하는 것은 자치의 본질에 어긋난다. 따라서 유럽자치헌장 제5조에서는 "자치구역의 변경은 관련 지역들과 사전에 협의되어야 하며, 주민투표제가 있는 경우 이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법도 자치구역에는 역사성을 증시하여 자치구역을 범상 일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안에서도 기준의 하나로 '역사적 동질성 확보'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전시용에 그친 듯하다.

3) 다른 광역시와의 비교

자치구역 개편은 대통령령 사항이다. 다른 말로 자치단체가 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 즉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광역시의 자치구 조정이 그 도시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대구시의 구역조정도 타 광역시의 경우와 비교해 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이런 비교를 위해 <표 1>에서는 광역시 자치구의 인

구가 정리되어 있고, <표 2>에서는 광역시의 대규모와 소규모 자치구의 인구가 정리되어 있다.

<표 1> 광역시 자치구의 평균인구

(단위 : 명, 개)			
시	인구*	자치구 수	구당 평균인구
부 산	3,722,182	15	248,145
대 구	2,369,972	7	338,567
인 천	2,464,661	8	308,063
광 주	1,371,909	5	274,382
대 전	1,385,606	5	277,121
울 산	875,464	4	218,866
광역시 평균			277,527

* 광역시 내의 군 인구는 제외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001년 3월 21일 현재)

<표 1>에서 보면 대구시의 자치구 당 평균인구는 34만 여명으로 광역시 중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대구시의 구당 평균인구는 광역시 평균보다 6만 정도가 많으며 부산보다는 10만 정도가 더 많다. 이런 사실은 달리 보면 인구에 비해 구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광역시별 소규모·대규모 자치구

구분	소규모(15만 미만)	대규모(40만 이상)
부 산	중 구 (58,193) 강서구 (62,137) 동 구 (127,138)	부산진구 (430,373) 해운대구 (408,842)
대 구	중 구 (91,860)	북 구 (409,353) 수성구 (459,658) 달서구 (588,546)
인 천	중 구 (71,522) 동 구 (76,057)	남 구 (420,348) 남동구 (407,845) 부평구 (546,520)
광 주	동 구 (123,647)	북 구 (475,992)
대 전		서 구 (476,893)
울 산	북 구 (121,073)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001년 3월 21일 현재)

<표 2>는 대구 중구보다 인구가 적은 자치구가 부산

과 인천에는 각각 2개씩이나 있음을 보여 준다. 또 대구 달서구가 광역시의 자치구중 가장 인구가 많으며, 대구에는 40만 이상의 과대구가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대구의 경우가 자치구간의 인구조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음과 동시에 분구(分區)의 필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국가적인 사안이기도 한 자치구 인구조정에 앞장서는 것은 대구에 더 큰 이익과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분구의 소지를 줄이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4) 기타 이슈

자치구 같은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다른 구역, 예를 들어 선거구나 교육구 등의 설정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자치구 개편의 이해당사자들은 주민들만이 아니다. 이번 구역조정안에서도 이런 점이 지적되고 있다. 개편안대로 자치구역이 조정되는 경우 대구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만약 구역 개편이 이런 것을 노리고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고단수의 대구판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런 구역 조정을 승인해 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 개편안이 한 국회의원의 주도로 국가 연구기관에 의해 중앙의 시각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

이다. 중앙에서 자치구역 개편까지 쟁겨주니 고맙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구시민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의 문제도 모르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없었으며, 의사를 반영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맺음 말

지방자치시대에 자치구역 조정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실재적인 측면에서 구역개편의 이익이 주민들의 손해와 불편과 고통을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음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안을 만들고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대구시의 구역조정안은 두 가지 모두에서 실패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의 자치구역 개편을 위한 전략으로 다음의 주장을 참고할 만하다.

-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해 조정하라.
- 경제조정 효과가 그리 크지 않는 상황에서 개편비용을 초과하는 구역조정은 피하라.
- 구역조정의 이익이 크다면 조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하라.



시민과 함께 걸어온 11년,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실련 지역조직으로는 최초로 1990년 6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의를 척결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한다’는 취지로 시민·청년·서민층 등이 결성한 시민운동단체이다.

지난 11년간 대구경실련은 시민운동의 불모지였던 우리 지역에서 시민운동의 가능성을 열어왔다.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침체기를 겪기도 했지만 대구시민들의 지지와 격려 속에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환경, 교통, 부정부패 등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누구나 일한 만큼 대접받는 공정한 사회, 검은 돈이 사라지는 투명한 사회, 돈 안 드는 선거와 깨끗한 정치가 실현된 사회, 부정부패 부조리가 근절된 밝은 사회,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 사회적 공공성이 실현되는 합리적인 사회를 위해 합리적인 대안과 정론으로 모든 사람들의 선한 의지를 모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이 바로 경실련 운동이다.

대구경실련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지향하며,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대구경실련의 개별기구로는 경제정의연구소, 정치행정개혁센터, 교육문화개혁센터, 환경센터, 시민안전센터,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등이 있으며, 보통 사람들의 참여 속에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비폭력·평화·합법적인 방법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구경실련에서는 활동과제, 혹은 취미를 같이하는 회원들이 모여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불교시민회, 산악회, 청년회, 사회정의파수꾼, 메산감시단, 부실공사감시단, 시민불안감시단, 불량상품감시단, 불공정거래감시단 등 다양한 활동조직에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함께 하는 시민운동 대구경실련 11년의 역사는 깨끗한 양심과 의식적인 시민들을 중심으로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합법적·비폭력적인 평화운동의 형태로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한 시민 운동이었으며, 우리 사회에 ‘경제정의’를 보편적 가치로 정립시키고 ‘시민운동’을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 대구경실련 11년 역사의 이와 같은 결실은 대구경실련 운동에 대한 대구시민의 지지와 참여를 통해 가능했던 것이다. 대구경실련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대구시민의 힘이며, 이러한 시민의 힘은 바로 대구경실련의 힘이 아닐 수 없다. 대구경실련은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대구시민과 함께 할 것이라 다짐하고 있다.

〈자료제공 : 김형석 | 간사〉

정의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시민공동체, 「대구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는 참여민주주의를 근간으로 98년 4월 11일 지역에서 시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창립되었다.

대구참여연대는 주민참여의 극대화와 투명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열린 지지공간을 확보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면서 질적으로 보다 향상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의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시민들과 함께 대구사회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활동경비 전액을 1,400여 회원의 회비, 재정사업 등 순수한 시민의 힘으로 마련하고 있다. 대가성 있는 후원금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편견과 이기심의 벽을 넘어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거창한 주의와 주장에 가려지기 쉬운 시민의 작은 권리를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권력의 횡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부정부패,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 도덕성을 잃어버린 기업활동 등에 대해 시민의 눈이 되어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꾼이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시민의 참여 하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신념으로 각종 대안제시와 연구를 멈추지 않는다.

대구참여연대 활동기구의 활동기구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센터
 - 주민참여 조례제정운동, 유권자 의정감시활동, 행정개혁운동
 - 시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청구운동
- 예산감시운동본부
 - 납세자 예산감시운동본부, 지방공기업예산감시활동
 - 대구시 예·결산 평가사업 및 예산낭비 제도개선운동
- 사회복지센터
 - 대구시 복지정책 및 복지예산 감시운동
 - 사회복지 정보공개청구운동 및 복지조례 입법활동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소액주주 권리찾기, 공익소송운동
 - 형정에 의해 침해되는 시민의 권리찾기 운동
 - 권리찾기 시민법률학교 개최
- 편집위원회
 - 시민과 시민을 잇는 시민운동지 격월간 '참여광장' 발행
 - 지역시민사회 목소리를 담아내는 웹진 발행(www.cham-i.org)
- 회원자치위원회
 - 회원간의 유대와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한 행사기획
 - 회원의 참여와 자원활동 프로그램 개발

(자료제공 : 한은영 | 간사)

다시 낮에 꾸는 꿈

이 태 수

경북 의성 출생(1947)
 『현대문학』, 『오래 동안』(74)
 시집 『그림자의 그늘』 『무엇한 비상이 꿈』
 『말속의 푸른 잎』, 『이 태 수』
 『세계문학』은상위원, 경인대 겸임교수

〈하나〉

물방울 속으로 들어간다.
 이윽고 투명해지는 말들.

물방울 안에서 바라보면 길들이 되돌아와 구겨진다.
 발바닥 부르드도록 걸던 그 길들 너머 또 다른 길이 열린다.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한 나날들.
 아득한 곳에서 둥글게 그가 웃음을 머금고 서 있다.

그렇게도 꿈꿔 왔던 투명한 말들이 비로소 물방울 되어
 굴뚝이고 있다. 햇살은 그 위에 찡글다 굴러 떨어진다.

굴뚝이며 나는 자꾸만 남은 햇살을 끌어당긴다.

〈둘〉

집을 짓는다. 남루한 세월이지만
 마음만은 늘 푸른 하늘 자락을 끌어안는다.
 새들이 어디론가 아득하게 날아가고
 돌아올 것 같지도 않지만, 마음은 제 출로
 해종일 두리기등을 만든다.
 서까래들을 다듬고, 출일도 하고, 방을 꾸며
 도배를 한다. 사랑채도 짓는다.

자그마한 창들로 뛰어내리는 햇살,
 마음은 벌써 뒷마당을 한 바퀴 휘돌아
 눈길을 멀리 창밖에 던져놓고 있다.
 다시 그는 기척도 없지만, 어느새 걸어 왔는지,
 앞산이 우두커니 앞마당에 서 있다.
 해종일 걸어온 낮익은 길들도 문득 낯설어지고
 나뭇잎들이 자꾸만 땅 위에 내리고 있다.

2월 하늘을 우러러 보며 ...



김창석

경북중·고 47회
경북학생산악연맹 대표상임위원 역임
경북대학교산악회 발기인 대표

한 국민주운동의 효시요, 4월 혁명의 횃불을 올린 방아쇠의 위력은,
그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피끓는 위국의 정신, 젊은 소년들의 타오르는 애국심,
그 시대의 요령에 분연히 앞장서서 흔들렸던 젖은 깃발은,
그 의로운 용맹에 감히 후배인 한사람으로서 보잘 것 없는 안목으로 그때의 정황을 이제 반추하는 세월 속에 본인도
아득하지만 그 무렵의 시점에서 초등학교생의 시각으로 기억을 더듬어 본다.
그 불도 산맥을 타고, 흘러내려 해마다 해마다 꽃피워 줄 줄을,
참고 기다리는, 군중이면서, 모든 나날은 어렵기 만하고, 어찌하여 그것은 되살아오질 않는 것인가.
서릿발같은 첫 울음소리에 몸짓하던 피안대소,
그 시대의 젊은 청소년들의 가슴속에 내재된 울분을, 그 시대의 나약한 시민정서를 대변해서 일어난 2월의 함성은
함으로 성스러운 일이고, 민주운동의 최초의 기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광복, 냉전, 분단, 독재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져, 기억이란 의식에 잠재된 형상은, 지금 동산 호텔자리, 선교사집 담배락 밑, 적산집 앞마당,
당시 대구고보(3회) 벽선 하나 두른 모자를 쓴 만행이 돌명퍼의 연결 쇠를 파손하여 아버지께 구증을 마구 들던 "혈
악한 분위기" 2-3살 첫기억에 일찍 각인된 형상이 남아있으니, 오직 하면 생의 부침과질이 실로 다양함을 운명이라
비무어 두었다. 마틴 동생이 태어나고, 부모로부터 애정이 소외된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겨울,
동산병원 선교사집 사이로 계성학교 넘어가는 쪽, 무수한 계단에 눈이 내려 기어서 오르는 모습들,
수도꼭지 하나에 수십 개의 양철물통이 줄을선 전경, 배가 고파 병병거리면, 물 한 모금 적셔 주시면 어머니,
장보려 가신 어머니를 지금 동산병원 주차장 오른쪽 비탈, 웅덩이 보리밭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곱돌이 생각했던
기억들,
그 후 어느 비오는 날, 잠시 차같은데 타고 어딘가 왔던 곳, 그곳이 지금의 삼덕동 파출소 뒤편 "잠업 취체소" 사태이
었다.
삼덕동 상당 벽돌담을 따라 뛰놀던 그 시절,
어느 날 뿜 북는 소리에 앞마당 방공호, 부엌 바닥에 자리를 깔고 대피하던 모습, 포탄이 무태부근에 떨어지고, 수많은
비행기 굉음이 갑자기 난 그날들,
피난 가기전 다락문을 각목으로 못집하던 모습, 요사이 대문학교 부근에서 되돌아 온 기억, 동생은 업혀 가고 나는 걸
다가말다가,
그 후 16천명대 앞을 서성거리다, 천으로 된 모자를 쓴 코 큰 병사들이 밀려와서 기겁을 하고 집으로 왔다. 영국군
엄마후 벽돌담 위에서 인계첩선에 달려 지폐를 낚시미끼같이 달아놓고, 까만 손이 가까이 가면 들어올리고 속태

우편 검둥이 병사, 헬로 기브미 포그렛..

그 후 우리 집 일부와 대구여중에 미군이 주둔하고 불이 났던 기억.

쓰레기통을 뒤지다 나를 보고 cat boy 라고 하면 미국 놀이, 한밤중에 구둣발로 기락을 수색하던 기억.

중앙초등학교 입학하러 손수건을 달고 갔으나 연방이탈로 종전 다음해, 코르타르로 종래진 판잣집 교실도 아닌, 그것도 오전, 오후반으로 마당에 등교했다.

분뇨가 소리마다 튀어 오르는 가설변소

그러다 2학년 짙좁, 수성고 나무다리를 건너, "잠입시험장" (홍나무 밭) 사택으로 이사를 와서, 그때부터 학교와 제법 먼 거리를 오가곤 했었다.

전후 신촌 최우안에 들어선 판자촌, 신원네가에서 세차하는 군용차, 지게꾼, 걸인, 각설이, 구두댈이, 고아, 곡미단, 집이 번두러라서 교내에서 늘 어항, 개구리알, 불고기 조판, 과학 반장을 도맡아 했었다.

어느 친구는 집에 놀러와서 응당이에 해엄을 치다 4번째 잠수 후에 보이지 않아, 과감하게 들어가 끌고 나온 기억, 이사는 면했다.

삼덕동에서 수성고 너머로 이사오니 옛동네 친구들과 놀다보면 늘 늦게 하기전 때로 수성고를 건너 귀가 한때가 허다했다.

호기심이나 의아심이 많아 거리를 배회하는 적도 많았다.

어떤 날은 삼덕우체국 부근에서 미림군 정문까지 따라가 무리 지어 모인 고등학생들이 본격하여 "체코슬로바키아 물러가라"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던 장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구에 온다고 있는 태극기를 만들어서 머리만 하면 영감이 탄 지나치는 차를 환영했던 장면, 동네에서 구슬치기를 하다 당시 2군 참모장 아들을 쥐어박았다고 불려가서 혼난 얘기, 나무베를 소리가 밤늦도록 들려오다, 일거리가 없으면 고요하고 적막함만이 감돌던 풍경기.

이 대통령이 대구를 중국의 어느 도시같다하여 간판을 한글로 바꾼 계기가 된 일들.

상기와 같이 그 초등학교 말년의 2월 28일은 얼마 남지 않은 졸업 분위기, 어수선하고 상급학교의 입시원서 시험등 심적으로 초긴장 상태의 기간이었다.

아마 전남 사대부속중학교 표집고사에서 선발돼 시험본 학생들의 성적이 좋지 않아

입자에 희망을 두라는 훈시의 함해 하고하려는 차, 내일은 일요일이지만 표집고사 문제가 준비되어, 모의고사를 치르니 모두 통과하라는 말씀이었다.

별생각 없이 다음날 얼마전 새로 지은 신축교실 3층에서 일요일 아침 햇살이 밝게 동편 창으로 환하게 비치고 오후는 흐렸던 날씨로 기억된다.

시험을 마치고 하고 길에 귀가하지 않고 시청부근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 집 저 집 다녔다. 해서 친구 서너 명이 어느 집인가 점심 대접을 받고 시청부근을 배회하던 중에 왠지 지겹한 맑은 고등학생들의 고향치며 달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 다녔다.

대구일보 옆 골목으로 몰리는 학생들을 따라 (단부지 공장) 영남 무자신탁영, 좁은 골목길에서 한길로 나오니 많은 학생들이 (150명 정도) 대학병원 쪽에서 16천병대 방향으로 몰려와서 도시사관사원 국채보상공원 변소 앞에서 집결하여, 무엇인지 모르지만 부르짖고 마구 오가는 목소리가 대수롭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순간, 대학병원, 16천병대 양방향에서 백차가 길을 막고, 모자 태를 턱에 걸치고 흐루라기를 붙여 곤봉을 마구 휘두르며 에워싸는 상황이 전개되는 몇 분동안, 휘두르는 곤봉을 기함으로 막는, 퍽퍽 하는 소리와 더불어 입대가 수라장이 되는 것 같았다.

길바닥에는 백삼 선이 표시된 콘크리트, 가방, 운동화, 책, 군용구두(워커) 등이 흩어져 있었다. 끝목으로 피산하는 학생, 넘어지는 학생, 연행되는 학생 등등.

순간 나는 친구와 같이 길바닥에 흩어진 제 물품들을, 순경 눈치를 피해 주워 모아, 지금의 영남부자신탁입구(골목)에 끌어 모았던 것 같다.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어느 학생에게 전달하고 집으로 돌아온 경로 기억된다.

★ 풀이켜 보면 암울한 그 당시 초등학교까지 민주당 유세, 참석 저지를 위해, 강제 등교라는 사실은, 자유당 독재의 밑거름이 되었고 어떤 우리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모스크바"골수 야당적 기질, 민주정치의 척도, 사실은 그 기질을 원천 봉쇄하려면, 직격탄으로, 집중포화를 마구한 행위로 표현해 볼지하다.

아니면 힘없는 소시민, 소외계층을 가볍게 무시한 처사는 아니었는지,

"못살겠다 갈아보자," "구관이 명관이다." 공립한 전후의 사회 정치현상, 화젯거리라야 관심사의 주된 내용이였다. 자유당 정권의 발악적 작태에 그 당시 시민정서를 아니면 민족정서를 대변해서, 시위행위로 돌파한, 그것도 단기간에 조직적이고 거교적으로 가장 이성적 민주방식으로, 고교생들의 순수한 애국적 행위는, 기록적인 사실이며,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날의 뒤통을, 저 프랑스의 오르레앙성을 탈환한 16세의 소녀 잔다르크의 기지와 비유한다면 과장된 말일까? 당시 학도들의 피를 부른 혁명의 전주곡이었으니까 말이다. 역사는 끊임없는 과거와의 대화라고 했는가? 현실은 과거라는 사실의 거울에 구속되는 속성이라면, 해방후 학생민주운동의 종적, 횡적 평가면에서 막강히 부각되어 하며 제 위치에 기록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유산처럼 전해져야 한다. 그 때 우리들의 눈에도 너무나 불쾌했었다.

어느 날 건부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께서 이웃집 현직 교사가 자주 방문해서, 선거에 동참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시면서, 언짢게 내 뱉는 말씀을 듣기도 했다.

어느 때는 안면있는 순경이 와서 뭐라고 뭐라고 하는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다.

★ 세월은 흘러 어느 날,

두류공원 한 모퉁이에 우뚝선 네 다리의 2·28민주운동 기념탑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쓸쓸한 봄날에 기념행사를 하는 장면을 몇 차례 만발차에서 보았다.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늘 자랑스런 긍지로 삼고 여태 지나왔다.

다음 세대에 향토를 대표하는 시민정신의 구심점이 될만한, 정신적 이념을 어떻게 계승하고, 일시적 행사보다, 진정 자의적으로 우리나라는 정신을 올바르게, 범시민적, 민주정신의 구심점으로 승화, 도약시켜 나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그 활성화 방법이 다소 미흡한 것 같다.

예컨대, 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민주시민적 의식과 국가의 존립, 애국심 고취, 절약정신, 세계 속의 우리의 의미 등을 깨달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여건을 개발해야 할이 시급하다 하겠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 정신의 한 표현으로 "양반은 싹뚱주가 동이 나도 푸러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고무한 선비정신의 청빈성을 비아냥, 강조한 밑바탕에는 외골스런 선비의 고집, 육심관을 강조한 것인가?

엘리트 의식에서 자존심관을 강조한 것만도 아닌 것 같다.

가난해도 만연하는 재물에 탐하지 않는 정신의 넉넉함,

빈 대술 같은 절개와 무지의 소크라테스적 가난과 일맥 한다 하면 비약된 표현일까?

과거 그러한 정서가 향토의 가슴 속에 내재된 선현들의 정신이었다면 바른 민주운동정신으로 번져나갔으면 한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식인 선언

전국 지역 지식인 일동

오늘 우리는 지난 세기동안의 중앙집권과 서울집중이 초래한 심각한 지역간 불균형발전 구조를 청산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우리의 견해를 전국민 앞에 엄숙히 밝히고자 한다.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개발독재 시대에 형성된 서울 일극 집중이 IMF 경제위기 이후 가일층 심화되고 있다. 특히 21세기 '신경제'를 움직이는 두 바퀴인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의 서울집중 심화는 지역경제의 앞날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울은 지방의 거의 모든 자원을 집어삼키고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다.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이 된지 이미 오래 되었고 한국인은 서울사람과 지방사람이란 '두 개의 국민'으로 분할될 기미마저 보인다. 자치단체와 지역기업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지역경제는 그 위상이 갈수록 위축되고 지역주민의 일터와 삶터가 황폐화될 위기 앞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갈수록 더욱 주변화되고 있는 지방에서 어찌 인간다운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지방의 위기는 무엇보다 전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중앙집권과 서울집중에서 비롯되고 있다. 과도한 중앙집권과 서울집중은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서울은 비만으로 지방은 영양실조로 생명이 위태롭다. '서울-과

잉'의 비효율과 '지방-부족'의 비능률이 겹쳐 나라 전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심각한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와 지역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적 갈등과 분열로 이어져 마침내 국가위기가 초래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며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기대되었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단체장 직선 이외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약간의 행정사무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 위임되고 있지만 그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으며 사소한 집행권을 인원과 예산의 뒷받침 없이 떠넘기고 있을 뿐이다. 세금의 대부분이 국세로 걷히고 있어 지방세 비중이 아주 낮으며 대다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나, 이를 추진할 인적·물적 자원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이처럼 우리의 지방자치는 '결정권 없는 지방자치', '세원 없는 지방자치', '인재 없는 지방자치'일 뿐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와 인적·물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알맹이 없는 지방자치로는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사정이 이렇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부 자치단체의 정책실패와 단체장들의 도덕적 해이를 핑계로 그 빈약한 지방자치조차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의 비효율을 해소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분권은 지방으로의 경제력 분산, 행정과 재정의 분권, 교육과 문화의 분권을 의미한다. 지방에 사람과 돈과 정보가 모이고 행정과 재정에서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며 지방 고유한 문화가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되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각 지역이 핵심적 구상기능과 중추관리기능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만 본분한 자기중심을 가지는 지역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몇몇이 살 수 있다. 지방에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교육, 의료, 육아, 양로 등 현물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할 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주민자치의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실질적 민주화를 실현하려면 먼저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해 각 지역에 지역혁신시스템이 구축되고 지역 간 협력과 경쟁체제가 형성되면, 보다 효율적인 지역중심의 새로운 국가발전모형을 전망할 수 있다.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의 3결합이 실현되면 민주적 지역발전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은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역패권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역패권주의는 지역주민을 불모로 잡고 그들을 선동하여 자신들의 당리당락을 추구하는 중앙의 정치집단들간의 권력 다툼에 다름 아니다. 정치권력과 경제력, 그리고 문화 자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타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지역패권주의가 나타났고 그 결과 지역갈등이 심화되어온 것이 아니었는가. 또한 남북통일이 경제통합, 정치통합, 그리고 사회통합의 장기적 과정이라고 한다면 지방분권은 통일한국의 발전모델에 필수불가결한 선행조건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는 정부당국에 지방분권을 최상위의 국정지표로 설정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분권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에 결정권'. 결정권과 집행권이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분권적 분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방과 외교, 거시경제정책과 국토종합관리를 제외한 행정은 대폭 그 결정권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의 이해가 걸려있는 전국적 문제의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해야 한다.

둘째, '지방에 세원들'. 더 많은 세원을 지방정부에 귀속시키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세 비중이 20%에 불과하여 '2할 자치'로 표현되는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입의 자치와 세출의 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지방에 세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자치단체간의 세원 불균등을 시정하는 합리적 재정조정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지방에 인재들'. 인재가 지방에 모일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에 인재가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분산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우수한 인적 자원이 지역에 결집되어 지역의 교육과 문화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대학의 육성을 비롯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지방분권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오랜 기간 누적된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지방분권은 오히려 그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지역갈등을 새로이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지역간 격차를 과거형산의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아울러 현안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신도시 개발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자치를 위촉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행정적 뒷받침을 위해서, 현재의 중앙집권체제를 고착시키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이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관되고도 강력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지방분권이 진정으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한국을 창출하는 토대이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에 필수적 요소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지방분권이 김대중 대통령의 15대 대선 주요 공약사항이었음을 기억하고 있으며, 중앙의 행정관료와 정치 집단들의 이기주의가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는 주된 장애물임을 직시

한다.

지역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는 이러한 지방분권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합리적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그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에 옮길 것이다. 우리는 자신들의 일터와 삶을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든 뜻있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는 지방분권에 관심을 가지는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여 지방분권운동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

2001년 8월 20일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이종주 | 대구상업정보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전 대구광역시장

머리말

아침에 빛나는 이 푸른 언덕에서 맥맥히 자라온 겨레의 얼이여, 반만년 깊은 뿌리, 비바람에 꺾일소나, 일찍이 서라벌에 꽃피어 화랑이었고 여기 새로운 햇살이 떠오르니 그 이름 태극단(太極團)이다.

1942년 왜적의 모진 손톱이 겨레의 숨결마저 끊으려 할 즈음, 바로 이 배움터에서 항거의 칼을 잡고, 일어선 봉오리 이상호(李相虎) 서상교(徐相敎) 김상길(金相吉) 김정진(金正鎭) 이준운(李俊允) 이원현(李元鉉) 윤삼룡(尹三龍) 등이 중심이 되어 봉쳤으니 뜻은 오직 조국의 독립에 있었고, 길은 다만 죽음을 각오할 따름이었다.

슬기로운 계획과 조직, 날카로운 이론과 방법, 매운 그 기백이 왜적의 간담을 질렀다. 군사학, 과학, 체육 공부에 더 힘썼으니 그 강한 힘을 겨레의 심장을 지켰다.

1943년 5월 9일 대구 앞산에서 큰 모임을 가지고 가꾸어 온 지난날을 가다듬고 싸워서 나갈 앞길을 굳게 다짐하였으니 젊은 서슴이 삼천리를 덮었고, 의로운 기개는 역사의 기둥이 되었다.

아깝다. 큰 깃발을 펴기도 전에 원수에게 탄로되어 가혹한 새순은 무참히 밟히고 펼친 날개 원뿔이 찢기었지만 매운 녀은 더욱 힘차게 소리쳐 티없이 맑은 피가 방울방울 겨레의 가쁜 숨결을 살리었다.

여기 돌을 짊어 자람 찬 그 이름을 새긴다. 고구려의

맥박이 이곳에 뛰고 신라의 목소리가 여기 울린다. 겨레의 아들 딸들이 고개 숙여 우러러 받들지니 태극단 그 이름, 길이 길이 이 땅에서 푸르리라.

대구상업정보고등학교 교정에 새워진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 새겨진 비문이다.

학생운동의 성격

대체로 학생운동이란 그 젊음이 말해 주듯이 폭발적이고 폭발적이다.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분위기 등에 위해서 일어남으로써 일반적으로는 구체적이고 조직적이 되지 못하고 권기적 성격으로 일관되는 것이 그 예이며 또 이 운동은 권권이나 혹은 물리적 제지에 의하여 그 때의 그 상황으로써 중단된다.

그러나 학생운동이 주는 의미는 그 시대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그 정신에 의해 기성세대를 자극하여 새로운 범국민적 운동으로 점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1920년대의 광주학생사건이 우리 민족의 힘일 독립 운동에 대한 불씨를 제공하였고, 대구의 2·28 학생운동이 우리 나라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된 사실이 그 으뜸 된 예이다. 그러나 여기에 논하고자 하는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은 보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 활동 강령 그리고 단명을 가지고 오랫동안 계획한 체계적인 학

생 독립 운동이라는 데서 그 의미를 찾고 이 운동이 여타의 학생 독립 운동과는 다른 차원에서 의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극단 학생 운동의 시대적 의의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은 1942년 불과 17, 8세의 어린 나이인 대구상업학교 학생들에 의해 일어난 항일독립 운동이다.

일제가 우리 나라를 지배한 36년의 말기인 1940년대는 일제가 세계침략의 과대망상에 사로 잡혀 제국주의자들의 만행이 극에 달했을 때이다. 사회적으로는 민족 말살, 창씨개명, 전쟁을 위한 민중수탈, 민족말살 황민화 강요, 민족 분화 말살과 일본어 강요, 신사 참배, 전쟁 물자의 공출, 징병징용의 강행, 정신대 동원 등이 이루어졌고, 교육적으로는 한국어 사용금지, 학생들의 군사 훈련, 소년들의 항공대 조직, 군입대 강요, 각급 학교에 배석장교 배치, 학도 전시 동원 체제 확립, 요강 제정 등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진통과 수난의 암흑의 시대였다.

태극단 학생 독립 운동

1) 조직 결사

1942년 일제의 악랄함이 극에 달했던 암흑의 시대에 이상호, 서상교, 김상길, 김정진, 이준운, 이원형, 윤삼룡이 주동이 된 26명의 어린 학생 단원이 조선 독립을 거사한 이 운동은 3·1운동의 가치인 태극기의 태극(太極)을 상징하는 태극단(T.K.D)이란 단명을 짓고 단장, 관방국장, 육성부장, 체육국장, 비서관, 부관, 회계, 무도부장, 군사부장, 경기부장, 등산부장, 씨름부장, 항공부장, 과학국장 이란 조직을 결성하고, 강령으로서는 3·1운동의 독립정신과 인도 간디주의 무저항 정신을 바탕으로 조선민족의 이상적인 단결과 능률로써 당면 최대 목

표인 조선 독립을 도모하여 투쟁 할 것이며, 그 종극의 목적은 전세계 인류의 영원한 평화와 자유 평등을 찾는 데 있다고 정의하였다. 때문에 태극단 학생 독립 운동이야말로 그 조직성과 치밀함과 대담함, 원대함이 우리나라 학생 독립 운동사에서는 전무후무한 일로써 높이 평가되어야 하고, 이는 반드시 그 진실함이 국가적 차원에서 재 조명되어 후세에 길이 보존되어야 한다.

2) 체포와 구금, 심문과 판결

태극단 학생 독립 운동은 1942년 5월에 결사되어 1943년 5월 9일 거사 일을 하루 앞두고 단원 중 한 명의 밀고로 불행하게도 단원 전원이 왜경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실로 생명을 건 독립운동이었다. 악랄한 왜경의 육체가 부서지는 모진 고문을 받았지만 그 기계와 정신은 조금도 굽하지 아니하고 정청당당하였다. 체포된 단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외연하고 땃땃하였다. 감옥에서 육사하는 불행에도 후회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1944년 대구지방법원 판결은 일본 국시를 반역한 국적(國賊)으로 판결하였고 일본 최고형인 치안유지법 위반의 죄목을 적용함으로써 단기 5년 장기 10년의 중형을 받았다.

미성년자의 단기 5년 장기 10년은 성인에 대한 사형(死刑)에 해당되며, 단기 5년 장기 7년이면 성인의 무기징역에 해당되며, 단기 2년 장기 3년이면 성인의 10년에 해당하는 중형이다. 형이 확정되어 김천, 인천 형무소에 분리 수용되어 복역을 치루는 동안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광복을 맞기 전 네 분의 지사들이 운명을 달리하였고, 광복과 더불어 출감한 단장 이상호(李相虎)는 그해 12월에 또한 후유증으로 유명을 달리함으로써 광복후 처음의 사회장이 치루어졌다.

이는 태극단 학생 독립 운동의 위대함과 타 운동과는 자못 의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태극단 학생 독립 운동의 평가

1942년대의 학생 독립 운동은 그 이전의 학생 독립 운동보다는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할 민족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전 국사편찬위원장 박영석(朴永錫)선생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광주학생운동이 단순한 학생운동의 차원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항일 독립 운동으로 평가된다.

즉 학생들이 일제를 몰아내는데 선두에 섰으며 이로 인해 거족적 독립 운동이 전개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태극단 학생 독립 운동은 이러한 의의를 넘어선다. 그것은 일제가 1941년 대륙 침략 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를 병참기지화 하려는 시기로 우리 민족에게 혹독한 만행을 저질렀던 암흑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일제는 태극단 학생 운동을 국기(國基)를 흔드는 사건으로 법정 최고형을 적용하였고 민중봉기를 우려하여 극비수사 보안에 철저를 기하였다. 그리하여 그 정신과 활동상이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역사의 올바른 인식과 평가를 해야 한다. 그 현상(顯彰)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1940년대 독립운동의 민족사적 의의를 새겨야 하고 또 이 운동은 단순한 항일 학생 독립 운동 차원을 넘어 항일 독립 운동사의 맥락에서 확실하게 조명되어야 한다.

맺음말

일제 치하 1943년은 성인들은 고봉을 감당하지 못해 일제에 협력하던 시대였다. 이러한 때 어린 소년들이 이러한 항일 운동을 계획한 것은 참으로 장한 일이다. 왜정 말기의 학생 항일 운동이기 때문에 그 평가가 더 큰 것이다.

그러나 광복 후 우리는 이념의 논쟁이 극심했는가 하면 민족의 정체성이 어지러웠고 친일과 반공을 구분 못한 시행착오 또한 컸다.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의 발견이나 현상이 너무나 소홀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함보 경산대학의 경산문화연구소가 훌륭한 자료집을 발간하여 그 진실을 소상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기성인들에 대한 엄한 교훈이며 이를 주도한 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부여해야 한다.

진실로 태극단 학생 독립 운동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신명을 바친 위대한 조선 독립 운동이었다.

우리 민족의 기개와 청년 학생들의 강한 의지의 표본이었다. 우리 고장 영남정신의 정맥으로 발현되었다.

이는 반드시 전국민에게 확실하게 조명되어야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오늘을 사는 청년 학생들에게 새 천년을 맞는 민족정신 나라 사랑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제1회 2·28대구민주운동

글짓기 공모전 입상작품 책자 발간



사단법인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제1회 2·28대구민주운동 글짓기 공모전 입상작품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였다.

제1회 2·28대구민주운동 글짓기 공모전 개최

<355명 응모> 대상에 경북고 김기황 군

사 단법인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공동의장 : 문희갑, 홍종흠)에서는 제1회 청소년 대상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4·1 교과서에 2·28민주운동 관련 내용이 수록된 것을 계기로, 자라나는 세세대가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공모전 반응은 뜨거워서, 총 355개 응모작품이 접수되었고, 경북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김기황 군이 대상을 차지하였다. 지난 6월 29일 대구은행 강당에서는 입상자 166명에 대한 상장과 부상 수여식이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홍종흠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짓기 공모전이 미래지향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적 행사라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2·28정신을 심어줌으로써 민주적 가치가 새로운 모습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특히 2·28대구민주운동의 역사적 사실이 교과교육 내용에 포함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기는 한편,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현실과제 이해에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문희갑 대구광역시장은 국제보상운동의 발원지이자 6·25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의 최후 보루였던 대구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난 극복에 앞장서온 자랑스런 우리 고장이 2002년 월드컵과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르고 나면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특히 글짓기 공모전을 계기로 41년전 대구학생들이 불태웠던 2·28민주운동의 고귀한 정신과 열정, 애국심이 대구 정신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수 심사위원장(매일신문논설위원)은 심사평을 통해 초·중·고학생들 모두 2·28에 대한 관심이 깊었고, 그 참뜻 계승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정연한 논리전개를 보여 주어 여간 반갑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자랑스런 선배들을 본받으려는 정신이 크게 돋보였으며, 입상에 든 대부분의 글들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과 솜씨가 좋았다고 평하였다. 한편 이날 수여된 입상 작품 내용은 교육홍보용 문집으로 발간, 각 학교와 입상자에게 배포되었다.



▲ 2001. 6. 29 제1회 2·28대구민주운동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금상수상자들에게 이진근 대구광역시 행정관리국장이 대구광역시장삼을 수여하고 있다.

출처: 대구광역시 행정관리국 제공



▲ 2001. 6. 29 대구은행 강당에서 500여명의 학생·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2·28대구민주운동 글짓기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왼내사진: 심사총평을 하는 이태수(李太洙) 심사위원장>



▲ 2001. 6. 29 제1회 2·28대구민주운동기념품모집공모전 시상식에서 홍중훈 공동의장이 우수작품상과 다수 입상자를 배출한 소속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 2001. 6. 29 제1회 2·28대구민주운동기념품모집공모전에서 문상수상자들에게 대구광역시 교육청 김춘효 중등교육과장이 교육감상을 수여하고 있다.

2001. 6. 7 제1회 2·28대구민주운동 글짓기 공모전 『사업위원회개회』
6. 16 제1회 2·28대구민주운동 글짓기 1차 작품심사(대구광역시교육청)
6. 18 제1회 2·28대구민주운동 글짓기 2차 작품심사(대구시문화예술회관)
6. 29 제1회 2·28 대구민주운동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대구은행 강당)
7. 16 대구광역시 신상철 교육감 취임
7. 24 「2·28햇볕」 제3호 편집위원회 개회(사무처)
7. 30 홍종홍 공동의장, 대구광역시 신상철 교육감 예방
7. 28 이수광 감사(한국기업경영학회장) 대구시 남산동 사무실에서 한국경영학회 현판식 거행
8. 14 홍종홍 공동의장, 세계 합창단 아시아태평양 심포지움 초청
대구시립합창단(45명) 인솔 단장으로 싱가포르 방문(싱가폴 빅토리아 극장 공연)
8. 17 2001 하계 세미나(포항시 구룡포읍 특설훈련장)
8. 26 문희갑 공동의장, 2003년 대구 U대회 성화 채취지 답사를 위해 백두산 천지를 등정하고 대회 성공 기원
9. 3 홍종홍 공동의장,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 지식인 선언 및 기자회견(대구컨벤션 센터)참여

◆ 참가 조의를 표합니다

- | | |
|-------------------------------|-------------------------|
| 6. 9 이진근 이사(대구광역시 행정관리국장) 부친상 | 7.14 안동일 변호사(본회 고문) 모친상 |
| 6. 15 신현직 교수(계명대학) 별세 | 7.23 라석환 이사 부친상 |
| 6. 30 최미경씨(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 부친상 | 9. 3 임원용 이사 부친상 |
| 7.14 문곤 예총지부장 별세 | |

◆ 축하드립니다

9. 8 박명철 사무총장 장남 결혼
9. 23 이해두 이사 (대구대학교 교수) 차남 결혼

2001 하계 세미나 기획

사단법인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2001 하계 세미나가 지난 8월 17일 은빛 찬란한 풍채인 구룡포 해수욕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40여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상호 친목과 결속을 다졌다. 특히 이수광 감사(한국해양소년단 대구연맹 회장)의 지도로 진행된 해양수련 프로그램에서는 해양 기초지식과 바다잠수훈련을 익히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 이수광 감사의 지도에 따라 기초 훈련을 하고 있는 2·28회원들



▲ 기초 훈련을 마친 회원들의 잠수훈련 장면

부고의 2·28학생의거기념 조각물



백태호

대구산업정보대학 교수
경대사대부고 10회

그년 여름 날씨는 일기 관측사상 최강의 열대야와 천년 황 가뭄이라는 어마어마한 표현으로 짐작할 수 있는 한발로도 유난스럽지만 특히 장마철 게릴라성 폭우의 양동으로 쏟아 붓는 물결기는 자연의 위대성과 파괴성을 동시에 알려주기에 족해서 종래의 지루한 장마라는 개념을 구 버전으로 환치시키기에 알맞다. 그래서 아열대를 달아가고 있던가. 그런 종잡을 수 없는 정보화시대의 속성을 담은 여름 더위가 그 기승을 잠시 주춤하는 것이 민주의 꽃이 싹트하는 2·28의 기상도를 연상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인가. 열대야 같은, 때로는 가뭄과도 같은 자유당 말기의 정치기상도에 전장 석화와 같이 내달리며 자유와 민주를 부르짖던 청소년들의 함성으로 휘갈겨 쓴 2·28이라는 민주의 새 이정표 역사가 낙서를 정서로 만들기까지 40여년은 오히려 짧은 세월이다.

8월 중순 수은주는 30도를 넘나들지만 이전의 폭거에 비하면 여늬 때의 여름날과 다름 아니다. 도시의 아침 일곱 시는 이르지도 않는 러시아워직전. 태풍전야의 靜中動을 함축하는 절전의 시간들이다. 더욱이 방학중의 8월의 이른 아침임에도 부고 운동장은 벌써 절충의 열기가 스치고 지난 다음의 고요가 깃들고 있다. 2·28 학생의거 기념 조각물이 오늘도 엄열을 견디고 종상을 맞으며 하늘을 향한 비상 자세를 지키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를 찾는 날은 입추를 지나서인가. 절후의 맛을 분명히 하는 듯 정신을 잠시 놓으면 초가을의 더운 날이 연상된다. 그때의 사람들이 건너다니던 아늑하던 길 이던 다리는 온데간데없고 이제 신천의 동서를 이어주기 위해 차량들만이 질주하는 수성교를 넘어 지하철 공사관 관광위를 조심조심하여 한국통신 앞에서 유턴으로 교문 앞에 이르는 동안은 등하교의 가니던 추억은 없었지만 '제23회 전국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의 교문을 가로누린 현수막은 부고의 배구와 과학명문의 면모를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임을 알려주어 아득한 학생시절 그때의 일이 새로워진다. 시인은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접어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

전은 간데 없다/ 어저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라고 무상한 세월을 노래했었는데 산업화를 넘어 정보화 세계화 시대로 달려오느라 세월은 UN창정기를 세겨두었던 삼덕노타리의 비석도 교통체증의 범인으로 몰면서 치위배리고 길 건너 아트막한 남대구 경찰서는 우악스런 건물로 바뀌고 가고사가는 길 호행집을 험사리 건너다니던 길은 넓어지기도 했지만 지하철 공사로 영일이 없어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라 다만 이동의 수단인 도로가 있을 따름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도심에 자리잡고 있기에 했지만 조용하던 학교주변은 buking술에 쌓여 학교는 5층 건물을 지어 새롭게 단장했지만 왜소한 면모를 피할 수 없으니 농경시대의 시와는 달리山川은 간 데 없고 人烟은 유구하다고 하는가. 늙수그레한 모습으로 찾아드는 옛 교정은 몇 건물만 체면유치로 남아있고 모두가 새 건물로 들어서 있지만 그래도 정답게 느껴지는 것은 꿈의 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탓인가.

벌써 학생들은 보충수업인가, 특기적성교육인가 하느라 고실 가득하다. 눈을 부라리던 혼욕주입의 인상과는 달리 인상 좋은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 늦게 오는 학생을 지도하고 있고 대구상고 벽쪽으로 붉은 북항의 새 건물에는 담쟁이가 중담전의 모습으로 엉기성기 기어 오르고 있는 본관 앞에 네 개의 화분이 짙게 질든된 대리석 마당 위의 청초, 적벽 네 남개의 조형물은 금방이라도 하늘을 향해 나르려는 듯 승천의 자세로 그 날의 함성을 간직하느라 무겁기만하다.

2·28 학생의거에 참가한 경북사대부고 제 10회 졸업생들이 졸업 31년만에 당시의 뜻을 되새기며 모교 교정에 제막한 2·28 기념물, 학교 본관 앞에 세워진 기념 조형물은 거대한 조각공원으로 학교의 명물로 자리잡게 되기까지는 아직은 더 많은 시공을 넓혀야 되는지 모른다. 하지만 역사는 이런 싹芽가 年輪을 풀리며 나이태를 넓혀가는 것 아닌가.

10회 동기생인 고주석 교수(텍사스대)가 구상, 설계하고 경북대학교 최용호 교수가 글을 짓고 중13회인 서애가 류영희가

글을 쓴 조형물은 剛健을 의미하는 강철로 제작되었고 靑, 赤, 黑, 白 네 개의 구조물이 독자적으로 비상의 몸짓으로 있어 균형을 잡고 있어 自律을 상징하고 있으며, 赤白, 靑黑이 서로 협동하는 형태로 사람 人자를 形象化하고 있어 協同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은 비상의 자세로 치솟아 온 겨레의 큰 소망이 힘이 되어 땅위에 솟는 기상을 포함하고 건축물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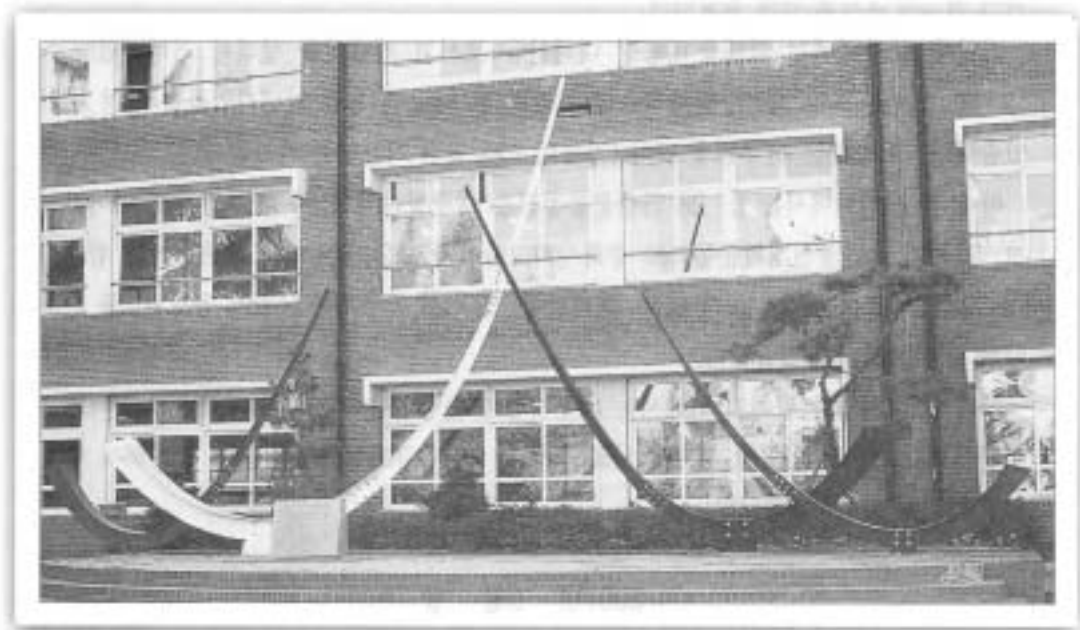
에 역동적 보안을 하며 네 개가 태극의 정신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여러 구조물을 모아 群鳥의 多樣性을 찬양하고 靑은 감원이요 맑은 샘이며, 赤은 정열이요 용기이고 태양이고, 白은 착함이요, 黑은 희생을 의미하니, 넷은 함께 한국성의 고창이며 민주혁명 정신의 제창을 드러내고 있다.

2·28!

너 순수의 대명사여.

오늘도 넌 청소년의 정열과 용기와 착함과 희생을 품고
炎熱하는 태양아래에서 풍상을 이기고 묵묵히 비상의 자세로
내일을 향하는 참 민족의 역군의 표상이어라.

대리석에 새겨진 건립의 말은 오늘도 오가는 후배들에게 자유의 정의의 소중함을 가리킨다.



기념조형물의 의미

- 人은 사람 人으로 협동을 강철은 강건을 각 구조물이 독자로의 균형을 잡았으니 자율을 상징하며,
- 人 형태는 '人' 겨레의 소망의 힘이 되어 땅 위에 솟는 기상을 포함하고 건축물의 정적 구성에 역동적 보안을 하며,
- 人으로 태극의 정신을 상징하고,
- 여러 구조물을 모았으니 구성의 다양성을 찬양함이고,
- 靑은 감원이요 맑은 샘이며, 赤은 정열이요 용기이고 태양이다.
- 白은 착함이요, 黑은 희생을 의미하니 넷이 함께 한국성의 고창이며 민주혁명 정신의 제창이다.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원가입 안내말씀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60년 2월 28일 일어났던 대구학생 민주의거는 광복이후 최초로 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었으며, 4·19혁명의 진원이었습니다.

그 동안 2·28 기념사업회에서는 당시의 숭고한 민주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해 40주년에는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을 모시고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였고, 「2·28 민주운동사」 출판,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특별 기념사업들을 펼친 바 있습니다. 또 올해는 41주년을 맞아 (가칭)2·28 공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본 사업회에서는 2·28 민주운동정신을 대구정신의 한 주류로 영원히 이어가고, 21세기 국민정신개혁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1차로 22,800명의 회원모집과 함께 「2·28 공원조성」, 「2·28의 햇불」 책자발행, 「2·28 민주운동 글짓기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대구시민과 출향인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으셔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2·28 기념조성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 9월 일

사단법인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문 회 갑 · 홍 종 흠

본 법인에 납부하시는 회비 및 협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거 귀사의 기부금으로 손금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재정경제부공고 제2001-54호).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3동 164-1번지
(대구은행 신암동 지점 2층)

사단
법인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귀중

7 0 1 - 8 1 4



자
표
인

「2·28의 햇불」을 읽고

■ 다음호에 꼭 다봤으면 하는 내용 :

■ 2·28 회원 동정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받는 사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3동 164-1번지
(대구은행 신암동 지점 2층)

사단
법인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귀중



7 0 1 - 8 1 4

제 134 호

2·28 회원가입 신청서

개 인	성 명	주 소 (-)		
	생 년 월 일	전 화	FAX	
	E-mail	휴대폰	회 비	10,000원
단 체	단체명	주 소 (-)		
	대 표	전 화	FAX	
	홈페이지	휴대폰	회 비	100,000원

※ 2·28 대구민주운동 기념사업회 등은 여러분의 정성은 2·28정신의 계승 발전과 우리나라 210인구발전에 큰 보탬이 됩니다.

※ 2·28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은 각종 자료를 제공받고, 회원명단은 영구히 전산입력 보관됩니다.

〈학생: 1,000원, 개인: 10,000원, 단체: 100,000원〉

입금계좌 : 대구은행 018-05-002264-2

(사)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겨레의 魂 — 郷土의 脈

太極團 學生獨立運動 紀念塔



1942년에 비밀결사한 항일독립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려 1975년 4월 11일 대봉동 옛 교사에 건립되었고 1984년 9월 23일 현 교사인 상인중 교정으로 이전되었다.



대구상업정보고등학교 총동창회

www.daesang.or.kr ☎ (053) 422-3111

우리고장 우리은행

21세기 최우량 지역전문은행 - 대구은행
강하고 튼튼한 지역의 대표은행입니다.

대구·경북에는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대구은행

www.daegubank.co.kr